

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2012년9월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 경제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2. 경제에 관한 질문 ..... 1
- 1.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8
- 2.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 8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제2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에 관한 질문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출 출신의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一鎬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출 출신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미래도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인구가 5000만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른바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우리 경상수지가 6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용평가의 상향 조정도 역시 낭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어지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61억 달러 흑자도 수출과 수입이 동반 침체된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각종 강력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모두말씀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4년 전 제가 처음 의정에 발을 디디고, 정확히 7월 22일입니다, 2008년에. 긴급현안질문을 처음 했을 때 첫 시작 말씀이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참 4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도 안타깝고 아마 장관님도 안타까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정말 세계경제 환

경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렇게 밖에 안 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마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만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아마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그림 잠깐 보시지요.

경제성장률, 잘 아실 테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굉장히 낮지요. 낮아지고 있고, 다음 그림에는 주요 기관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무려 1.8%로 올해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우리 기획재정부는 3.3%, 다 이렇게 지금 낮춰서, 애초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낮아진다, 최근에는 결국 3자(字) 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바로 우리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3자, 3% 이하도 가능하다. 이 원인, 우선 원인분석이 잘돼야 할 텐데 어떤 분석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세계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촘촘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등단하셔서 7월 22일 날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아마 직전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 지금 5년째 전 세계 경제는 흉년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잠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이후 다시 유로존 쪽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져서 그 영향을 이번에는 이른바 브릭스 국가라고 하는 중국 등 신흥국까지 다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해서 그나마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선진국은 어려웠지만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은 견조했기 때문에 우리 수출시장의 73%를 차지하는 신흥국 시장에 힘 입어서 우리가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흥국 시장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요약해 보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

황이라고 봅니다.

○**柳一鎬 議員** 예, 그래서 참 좀 답답한 현실로 진단을 하시는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입 증감률을 보나 설비투자의 통계를 보나 또 민간소비를 보나 참 여러 모로 어려운 것은 다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장관께서도 ‘2%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내년도 성장률도 그렇다면 역시 원래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 아닌가…… 선부른 예상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내년을 전망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당초 저희들이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9월 16일이 되면 IMF에서 수정전망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의 올해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 하향 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4.3%보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기구 등의 수정전망치 등을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말까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산 문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것 어떻게, 그래도 정부의 힘을 발휘해서 성장률의 하락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우선 통상 경기부양의 상당히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집행률을 상반기에 집중시켜서 부양을 하는데, 우리 올해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정확한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 한 2조 원 정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떤 방안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업과 가계 쪽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고 투자와 내수 쪽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수출 여건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 부문에서 활력을 부추기기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급적이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쪽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쪽 또는 투자와 소비 심리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내수 활력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국가채무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당해연도 재정수지는 다소 악화되더라도 총량으로 나라 빚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 저희들이 8.5조 원 수준의 1차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오늘 4.6조, 2012년도 4조 6000억 2013년도 1조 3000억 규모의, 합쳐서 5조 9000억 규모의 2차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막 여기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柳一鎬 議員** 지금 상당히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틀이랄까요, 도구는 한정이 돼 있는데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정건전성 말씀도 하시고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빚을 늘리는 대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10조 원 이상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 급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방금 설명드린 대로 1차 8조 5000억, 2차 올해의 경우 4조 6000억을 더하면 재정투자 보강 규모가 13조 1000억이 되어서 올해 예상되는 GDP의 1%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해 왔던 추경의 0.6%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고 역대 규모로 보더라도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효과는 추경 편성, 통상적인 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데에 두 달 정도 기간이 걸려서 실제 집행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

성 요건에 관한 물리적인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거기에 적합한가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발 빠르게 행동을 하고 국가채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길로 재정투자 보강 대책을 선택했습니다.

○**柳一鎬 議員** 다음으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두 화두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격차의 증가에 의한 경제민주화 논쟁이 활발한 점이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경제민주화지만 이것이 또 너무 과하게 되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라든가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해서 대개 크게 한 서너 가지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라든가 금산분리를 도로 강화한다든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 119조2항에 나와 있고 1항을 보완하는 그런 규정으로 사실상 1항과 2항이 맞물려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 찬성합니다.

정부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시다만 그동안 동반성장이라든지 공생발전 등을 통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라든지 또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의 취지도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지적하신 순환출자의 금지라든지 금산분리의 강화와 같은 개별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그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정책들이 나오게 된, 또는 현재의 관행이나 제도가 파생되게 된 연혁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라든지 등등을,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필요성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든지 등등을 잘 감안해서 한국적 현실의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적절하게 치유하면서도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柳一鎬 議員** 장관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안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짧은 대정부질문 시간에 이것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중요하고 소위 그 영향이 큰 정책을 제가 다, 저의 제안과 또 장관님의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막 시작했지만 실제로 얼마 시간 더 남지 않았습니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정말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부에서도 장관님을 필두로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물가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정기국회 때까지만 해도 물가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심각성 때문에 모두들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물가추세는 총량으로 보면 조금 안정이 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서 심지어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물가상승률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물가가 4.0% 올랐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2% 중반대의 물가상승을 하더라도 특히 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그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와 농수산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품목의 경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물가가 높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경우라든지 또는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그리고 보육료 등등 또 다

른 차원에서 서민들께서 최근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품목들의 경우, 품목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물가수준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상 물가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물가상승률이 체계적으로 꾸준히 높아 왔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경쟁을 촉진하고 거품을 빼고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운동을 진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추진을 꾸준히 해서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비슷한 2% 내외의 물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1%포인트의 격차 가운데 올해는 한 3분의 1 내지, 욕심을 좀 내자면 절반 수준까지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조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그 1%포인트 격차까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기저효과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와 지표상의 물가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에너지 말씀하셨지만 유가라든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물가인상 효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표가 좋다고 만족하지 않는 자세인 것 같아서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는 특히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유념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보육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물가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물가에도 중요하지만 작년, 올 초 해서 보육료 때문에 특히 지방재정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확대 구상과 또 지방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난해 말 그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660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3788억 원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순증 효과가 되었고 2851억 원은 보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추

가로 늘어난 그 수요에 대응하는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가 예기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다는 뜻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기하지 못하였던 수요로 인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올해 보전해 주고, 다만 제도 변경에 따라 순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인 3788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의견을 다 모으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주 목요일인 9월 13일 날 시·도지사협의회가 다시 열려서 이 문제를 제차 논의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미 전국의 127개 기초자치단체는 변경된 제도에 따라서 소요되는 추가 부담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있는 구청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구청,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구청에서 보육서비스가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치단체들과도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제공하기로 했던 보육서비스는 중단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균형재정, 2014년까지는 원래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13년까지.

○**柳一鎬 議員** 13년까지인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柳一鎬 議員** 그래서 지금 올 2012년 보면 상반기에도 벌써 11조 5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기 지출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2012년 재정수지 전망이랄까는 어떨고, 2013년에는 과연 예상대로 그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12년 재정수지는 당초 GDP 대비 1.1% 적자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관리대상수지이고 통합수지는 1.6% 정도 흑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1, 2차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통해서 지출소요가 더 늘어난 데다가 경기하강 흐름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의 세입 여건이 원만하지 못해서 예산상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 봐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균형재정 달성 여건 자체는 악화되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종래에 전통적으로 해 오던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국가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창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면 내년도에도 큰 틀에서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議員** 창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산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소위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늘 해 오던, 그렇지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이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좀더 재정 투입 규모는 줄이면서 국민들께는 돌아가는 효과는 동일하거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柳一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수지에 관련돼서 감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울이라는 게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높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그와 아울러서 세율 변경이 너무 잦으면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정책의 일관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세율체계는 가급적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수 확보는 첫째, 선진국보다 좀 낮다고 생각되는 과표 양성화 비율, 뒤집어 말씀드리면 높다고 생각되는 지하경제 비율을 꾸준히 줄여 나가면서 둘째,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셋째,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세 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있고 그것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데 큰 문제였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감세를 했지요? 이 정부 들어서 하신 것은 사실이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약 한 10여 년간의 세율 감소 현황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4%,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0%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소득자는 4%p 낮춰진 거고 참여정부에서 또 낮췄고 이명박 정부에서 낮추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오히려 세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한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고소득층과 동의어나 하는 데 대해서 우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그러면 대기업은 부자고 중소기업은 가난하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는 그런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볼 것인지 당해 연도 소득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볼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러나 일용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뜻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부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감세를 해서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나타날 효과는 63조 8000억입니다. 그 가운데 51%가 서민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였고요, 47.3%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였

고, 나머지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감세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감세는 소득 계층 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로 평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는 이와 같은 감세조치를 매우 유효적절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시작된 5년째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정책 대응을 충분히 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3.9%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마는 OECD 회원국 평균은 22%p나 급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가로 설명드립니다.

**○柳一鎬 議員** 예,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관님은 잘했다고 하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 및 이윤을 많이 남긴 소위 부자 법인들에 대한 세액 감소가 절대 액수로 봐서도 오히려 적다는 것은 사실은 퍼센티지로 볼 때 저소득층에 매우 집중이 된 감세였다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평균 납세자에게 집중이 되는 감세였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감세 규모가 5년 동안 63조 8000억 원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산한 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 그것을 인용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산정책처가 2009년에 감세 규모가 누적 90조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하고 2012년 7월에 약 80조 정도 된다고 수정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0조에는 그동안 있었던 미세 조정 차원의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와 작년도에 있었던 일부 세법 개정 효과를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집계를 해 보니까 보고드린 대로 63조 8000억이었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누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누적으로 63조 8000억이었습니다.

**○柳一鎬 議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

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수 추이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柳一鎬 議員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율을 한 번씩 낮출 때마다 법인세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1~2년 후에는 늘어나지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까.

물론 저것이 이른바 법인세율을 낮춘 데에 의한 투자활성화 효과만으로 설명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적 효과를 강조하려고 하면 소위 일반균형적인 효과,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다시 그것이 세수를 높여 주는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63조라는 숫자도 완전히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동의합니다. 특히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이 2000년에 30% 남짓했다가 올해 지금 23%까지 내려왔습니다. 12년 사이에 7%p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8%에서 지금 22%까지로 6%p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세계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 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법인세율만큼은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柳一鎬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리와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柳一鎬 議員 다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2개의 커다란 소송이 있었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柳一鎬 議員 삼성하고 애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덜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코오롱과 듀폰 사이에도 결과가 둘 다…… 소송 결과가, 물론 1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왔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전반적으로 말씀이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의 사실 우리가, 세계의 추세는 자유무역으로 가고 우리가 FTA를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柳一鎬 議員 그런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보호무역적인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의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실제로 행정부나 사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우선 두 건의 특허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 타국의 사법 절차에 따르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편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 분쟁을 포함해서 보호무역적인 그런 추세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선 양국간의 민간 체계의 협력 채널들이 있습니다. 또 정부 간에도 공식·비공식적인 그런 협력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가능한 한 모든……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사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柳一鎬 議員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력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柳一鎬 議員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그리드라는 방안도 실제로 지경부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추진 사항이 영 좀 소극적이고 빨리 안 나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근본적으로 스마

트그리드는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져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또 전기요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전력망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에 실증단지 등을 통해서 지금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좀 지식경제부가 소극적이다 하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一鎬 議員**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柳一鎬 議員**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행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유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5분)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앞에서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박기춘**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박기춘 의원입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음란물 확산과 우범자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전문적 인력의 부족함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8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금년 12월 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49분)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참으로 힘들고 무섭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입에 올리기도 참 꺼리는 범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최근에 아동 성폭력, 그 밖에 끔찍한 범죄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성윤리 의식 부족 등의 개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음란물이 범람하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미흡에서 오는 개인의 좌절 또 사회 부적응,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형사법적인 측면과 함께 중요한 사회 구조하고 관련된 양극화라든지 사회 부적응이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 이처럼 끔찍한 사회 병리 현상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어땠습니

까?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 경제의 파탄, 남북 평화의 위기, 부정부패의 만연,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린 대한민국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모두 빌 공(空) 자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즉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슬로건 아래서 재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의 계열사 수가 43%, 자산총액은 77%나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벌 계열사가 279개가 증가했으니까 휴일을 빼면 매일 1개씩 늘어난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이들에게 무려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시대착오적인 부자 감세와 재벌 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에듀 푸어, 실버 푸어,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주거, 교육, 복지, 건강, 노후, 어느 것 하나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출산율은 OECD 꼴찌, 자살률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일자리 무능정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매년 25만 개씩 늘었던 일자리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20만 개에 그쳤습니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36시간 미만의 나쁜 일자리가 38만 개나 늘어나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참여정부 때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총리, 이처럼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면서 특히 소외 계층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48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747공약이 정말 빌 공(空) 자 공약이 됐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747 이게 공약은 아닙니다. 5년 이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공약은 아니고 이걸 국가적인 장래의 비전을 제

시한 것입니다. 가령 4가 국민소득 4만 불인데 그걸 어떤 수로 2만 불 이하에서 5년 동안에 4만 불 달성하겠습니까? 여하튼 이것은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부자 감세 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달리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 앞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당 부분 또 답변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삼가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5년 전의 747공약까지 변론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나마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라는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번 새누리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모든 후보들이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최저생계비를 계상하는 기초인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경제 민주화니 반값 등록금이니 무상보육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도 없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 정당 따라하기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반서민적이고 반노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1.4%에 불과해서 역대 최저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빗더미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부채·공기업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돈벌이는 시원찮은데 기름값·전세값·통신비·대학등록금 등 물가가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려 922조에 달합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연체율마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깡통주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집값이 빗보다도 더 많은 주택, 대출금이라든지 전세금 이런 것에 의해서 집값보다도 그러한 빚이 더 많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깡통주택이 18만 5000가구, 이들이 떠안고 있는 빚이 58조에 달합니다.

총리,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깡통주택 보유자가 신용부도에 빠지고 결국 금융권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부실화되는 시스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도 언론에서든지 그런 문

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견 심각한 사태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LTV 비율도 우리가 40% 수준이고 연체율도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이고 또 집값이,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만 전국적인 평균 그리고 수도권 평균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하락 폭이 크거나 속도가 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본적인 정상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부의장, 강창희 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표 의원** 예, 하우스푸어 문제 심각합니다.

총리께서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후보가 이와 같은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담보주택을 매입한 뒤에 임대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과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겠지만 이 제도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도 그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 과연 그것이 아무 부작용이 없이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겠단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우스푸어의 채무자뿐만 아니라 집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채무를 지고 있는 소위 다중 채무자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균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와 같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가고 있는 이런 채무자들에게는 어떤 도덕적 해이나 유혹이 생길 것

인지, 그다음에 그 경우에 가격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경제사정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거기에 관여했던 금융기관이나 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보다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그런 점들을 검토하셔야겠지요.

그렇지만 시스템 위기가 오게 되면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집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조차 못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 지방재정의 위기 더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에 따른 교부세의 감소,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2007년에 18조였던 지방채 규모가 작년에는 2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말 여야가 합의했던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부족한 지방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총리실 주관으로 있는데 몇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더 과감한 국비 지원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금년도, 우선 보육과 관련된 지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지방과 잘 협의를 해서 보육 중단은 없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해결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기재부장관이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안, 지방과 중앙이 그것을 분배하는 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측과 협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더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저희가 저희 안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목요일날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잘 협의를 해서 여하튼 보육이 중단되지는 않도록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예, 대책이 좀 시급합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보조율을 근본적으로 올리는 문제와 같은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하는데 이것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재벌 프렌들리 정책 아래서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탈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8%, 322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절반 이상은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처럼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기준을 13년째 똑같은 48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또 실패를 해서 폐업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 가령 재래시장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과가 미흡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과세 기준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어떡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과세를 투명하게, 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세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영업자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세의 투명성에 말하자면 예외 또는 사각지대로 두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비추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제상의 대책과 함께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간이세액, 간이 과표를 그냥 높여 놓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소득세처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체 과세의 투명성, 간이 과세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진표 의원** 또 한 가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SSM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를 위한 보완 입법은 물론입니다마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 SSM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뭐 그동안에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소위 상생법·유통법을 통해서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많은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취급품목을 제한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더 강화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지켜 나가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나 제약은 합리적이고 최소한 범위내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취급품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어느당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난번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특위를 즉각 가동하면 됩니다. 출자총액 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개선 등을 입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결코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 나가되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아내고 동반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국민을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분은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폄하하고 이에 반발한 캠프 실세는 그를 ‘정서적 불구자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데 정작 박근

혜 후보께서는 ‘두 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최근에 수출입이 함께 추락하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장기화되는 조짐과 관련해서 정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보완하는 취지에서라도 내수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기재부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 보강의 대책을 지난번에 했고 또 오늘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쪽에서 보강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조치 내지는 예산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또 여당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 말까지 1%로 인하하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환급해 준다’ 하는 것이 부양책의 내용으로 발표됐는데 이와 같은 발상, 연말정산을 앞당겨서 해 준다는 것 전형적인 조삼모사 행태입니다.

경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보다 과감하게 경감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취득세 경감으로 함께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내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경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방경제라는 게 건설경기에 의해서 크게 좌우

되는데 LH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80% 가까이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방경기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이신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차관입니다.

○**김진표 의원** 차관께서는 LH공사의 부채가 131조, 아시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생긴 채무 같은 것은 본래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의 채무가 몇 조나 됩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지금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한 42조 정도 됩니다. 전체 부채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김진표 의원** 5년 전에 우리 민주당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반대하면서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는 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이 인수를 해서 클린 컴퍼니를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합을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지방경제에 큰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통합으로 LH공사는 빚더미에 나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포기하고 투자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규모가 무려 120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지방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민주당의 민생추경 요구를 4년 내내 묵살하다가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생추경을 주장한 사람입니다마는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의 선심성 추경에는 반대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시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추경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리 서둘러 봐야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 배정하고 집행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어차피 연말이 될 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진표 의원** 그런데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정도는 뭐냐, 내년 예산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김진표 의원**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예산은 숫자로 구체화된 정책의 우선순위고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민생경제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킨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경제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내년 예산 편성만큼은 민주당 요구에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새롭게 밝히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그먼 교수도 최근 한국에 대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조언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청년·여성일자리 확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의료 공공성 강화와 같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일자리예산·민생예산·복지예산의 대폭 증액, 이것만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아내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해 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경기 하남에서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역에서 택시 운전도 하고 청소차 타고 쓰레기도 수거해보고 장애인시설 가서 봉사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뭘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정치인 싸우지 말고 우리 서민 잘살게 해 달라’는 아주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민생을 앞세우고, 자영업자·중소기업자 살리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서민 민생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1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22만 소상공인의 57.6%가 월수입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을, 어려움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권력자인 대기업과 약자인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720만 자영업자가 만약에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경제 붕괴가 아니고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공동체의 붕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보통 ‘9988’이라고 합니다. 업체 수가 99%, 일자리가 88%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경제 살아납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논의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얘기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권력 남용을 막되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을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해서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통합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앞에서 질의하신 김진표 의원께서 부자감세 많고 일자리 창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세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3조 8000억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세 중에는 이른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저소득 근로층의 소득세 부담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부담 감면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 정책 전반을 부자감세라는 용어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는 글로벌금융 위기 이전부터 지난해 말까지 81만 명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올해 적어도 40만 명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년간 121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에 벌써 한 45만 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치 수치로 보면 지난 정부와 비슷한 연평균 약 24만 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견조한 성적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형상 수치로만 본다면 일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161만 명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618만 명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120만 개 정도 는다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선전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민들께는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봅니다.

○**이현재 의원**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다음에는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재 의원** 그래도 국무총리께서 서민 민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기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88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요. 총리께서도 네 차례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중소기업, 서민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의 노력이 좀 미흡함도 있겠지만 대기업 집단에서 그동안에 해 온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하도급 거래의 잘못된 거래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게 단시간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 의원** 총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6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3.2%로 금액은 186조입니다. 이 186조는 11만 개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반성장, 공정거래, 공생발전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감시 감독을 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현재 의원** 또 하나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지금 1831개입니다. 작년에만 277개가 늘었습니다. SK가 94개, 삼성이 81개, 현대자동차가 56개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가 계속되니까 중소기업·자영업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기업집단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 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와 같은 기업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바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편법상속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양자를 잘 구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반성장, 공생발전 그리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부로서도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국무총리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열사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늘어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계열사를 늘려서 내부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입니다. 2006년에 2.7%가 2010년에는 2.3%로 확대됐습니다. 선진국 보면 프랑스는 영업이익률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8%입니다. 독일은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오히려 7%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격차가 심화되는데도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반성장 잘되어 오고 있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효과가 단기간 내에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영업이익이 격차가 커졌다 지금은 조금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동반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전형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납품가 인하라든지 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되면 그것을 원가에 반영을 제대로 안 해 준다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지적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국무총리께서 문제의 핵심은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심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대기업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현재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유능한 경제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동반성장, 상생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엇보다 대기업 총수 및 대기업의 CEO들이 근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혼자 갈 수 없다, 함께 협력업체하고 가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하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동반성장, 상생협력 아주 소리는 요란한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다, 죽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라든지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구두발주 취소가 비밀비제합니다.

지난 2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이 65%라고 그러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두발주지요. 납들은 ‘구두발주 수주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기업한테 구두발주 안 받으면 거래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두발주 취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구두발주 취소도 중소 협력업체들이 겪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현재 의원**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 거래에 있어서 마진도 협력업체하고 인터넷 다 연결해 가지고 속된 말로 죽지 않을 만큼 2~3% 이렇게 인상해 준다고 합니다.

화면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미반영이 절반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지난 9월에 부산, 대구 성서공단 가서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크게 감소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보시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때 제가 모두인사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지난 6월로 기억하는데요—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이런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 것을 제가 소개했던 것이고요.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결코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실태를 매년 서면조사를 합니다. 서면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업체가 한 57%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한 45%로 일단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그야말로 실감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기술 탈취와 함께 정말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 예, 계속 엄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계속 생기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64건에 대해서 1조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당매출이 얼마냐 하면 119조입니다. 119조의 1%를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31회사 적발된 삼성은 28조 부정매출에 과징금이 0.9%입니다. 현대차는 17조 부정매출에 과징금이 0.6%인 1000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 정말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위법행위를 해도 대기업의 법 위반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큼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 저희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재한 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한 410억 정도 했고요, 2010년에 한 1110억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3700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튼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법 적용과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시는 감시대로 하고 법 적용은 엄격히 하되,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들과 대기업의 CEO들의 인식 변화를 기초로 한, 지금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동반성장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1/4분기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하겠다는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이제 앞으로 담합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문화 확산, 동반성장 하려는 문화 확산, 더욱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한테 물건 값 제값 받게 해 달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인하라든지 구두발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돼야 되고 또 협동조합에 신청권만 주는데 협상권도 주고 또 고발권도 공정위만 갖지 말고 중기청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동반성장 확대하기 위해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현재 하도급 관행이나 실태를 볼 때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법리 문제라든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택시운전을 가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초에도 택시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가서 교대시간 2시까지 했는데 제가 5만 1000원 벌어서 가스비가 1만 6000원, 그래서 3만 5000원, 사납금하고 일당으로 1만 3000원 이렇게 받았습시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서민생활을 많이 아시는데 우리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 된다고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 150만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대개 15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택시가 어려운 것은 연료비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LPG 유가보조금이 현재 10년 전의 유가보조금 그대로입니다, LPG 값은 2배 올랐는데.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올려 주든지 디젤택시를 도입하든지 또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유류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연료를 다변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의원** 서민, 민생 어려움 중의 하나가 택시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현재 의원** 자영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절반이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에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세워진 대책은 나름대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요 내용이 창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 여러 가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자영업 또 서민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현재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720만입니다. 묻지마 창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3년 지나면 절반은 망하고 절반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정부가 수수방관해서 그런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지인한테 얻는 게 41.6%, 정부에서 얻는 게 2.8%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사실 정부도 묻지마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우선 전국의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부가 상권정보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업종이 과밀되어 있다든가 또 앞으로 성공 가능한 업종은 무엇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고, 이것도 특정 과밀 창업 쪽에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창업 자영업들의 생존율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 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하는 데 교육 연간 몇 만 정도 교육시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한 20만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자영업자가 720만인데 20만씩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그다음에 좀 선택적으로 잘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 점에 대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이현재 의원**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자영업 전통시장 어렵게 하는 것이 대형 유통점이 대거 진출하는 거거든요. 지금 SSM 정부가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 446개가 지금은 1155개가 됐어요. 두 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방관 내지 조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방관 내지 조장하기보다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SSM 출점에 대해서 등록제 등 규제를 2010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과 후를 보면 그 전에는 월 평균 18건이고,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SSM 출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규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 의원** 자영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이현재 의원** 자영업이 잘되려면 창업 전에 창업 퇴출 이런 단계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지원공단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소상공인지원공단을 만들어서 과연 그러한 취지가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부처 간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민의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수도권 혼잡비용으로 매년 15조 원이 낭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교통체계도 철도로 가는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이현재 의원** 그래서 이것이 서민들을 위해서는 철도 수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구인 경기도 하남의 하남선에

작년에 지하철을 확정시켜서 광역철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75% 받는 광역, 예산 지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남선은 광역 교통비율이 76%입니다.

저도 이런 지원을 위해서 대광법 발의도 했습니다. 당위성 있는 이런 하남선 같은 데는 75% 지원되도록 잘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서 기존 도시철도의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련 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수도권 서민이 편히 살게 하는, 손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남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선심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법 하나라도 만들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가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는 국민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이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갑 출신의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업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견해가 충돌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들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지금 몇 명이 죽은 줄 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 22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스물두 명씩이나 죽어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구조조정 자체가 정리해고, 이른바 정리해고의 근거가 미흡한 부당한 구조조정 아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부분, 저항……

○**심상정 의원** 불만 때문에 죽어 갑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심상정 의원** 불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을 짐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을 해서 많은 처벌을 받은 그런 사정, 그리고 또 후속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서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생계가 어렵고,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 스물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단 유서 한 장도, 메모 한 줄도, 전화 한 통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 쌍용자동차들이 죽어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심상정 의원**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가 국정의 주요 현안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국정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노사 간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근로감독 차원에서 그것을 감독을 하고, 그밖에 근로자들이 복직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분들이 새롭게 취업을 한다든지, 또 생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그런데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즉흥적이……

○**심상정 의원** 책임 있게 검토하신 적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심상정 의원** 우리나라에서 한 사업장이나 또 학교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22명이 죽었다고 하면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요.

○**심상정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심상정 의원** 그런데 이 나라 국민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22명이 죽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죽어도 될 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이제……

○**심상정 의원**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노동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편입니까,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쌍용차……

○**심상정 의원**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을 한번도 들어 본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무급휴직자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정부는 평택시에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또 지역형·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쌍용차 재취업 지원 TF 운영을 통해서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퇴직자 2152명 중에서 지금 현재 1250

명이 재취업했고 실업급여 156억, 고용촉진지원금 80억을 지급했고 생활안정자금 용자도 2011년에 2억 2000, 2012년에 2억 5000 등 이와 같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지금도 해고자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국가가 쌍용자동차 사태에 주목해야 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되는지를 설명 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총리께서……

좀 이따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심상정 의원** 함께 이성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마음의 귀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영상 틀어 주십시오.

(11시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마디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춘 그런 태도 그런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다섯 가지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따지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권이 이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노동권도 복지도 경제 민주화도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첫째, 쌍용자동차는 동아자동차에서 88년 쌍용자동차로 인수된 이후에 98년 대우그룹으로 99년 조흥은행으로 2004년 상하이기차로 2009년 다시 법정관리로 2011년 마힌드라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구공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여섯 번이나 주인이 바뀐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업 자체에 그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용자동차가 98년 대우그룹으로 팔려 갈 때부터 2011년 마힌드라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 주인이 바뀌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 기막힌 운명에 정부가 책임져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2004년에 1조 2000억 상당의 쌍용자동차 회사를 상하이차에 단돈 1200억에 그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를 반납했고 쌍용자동차는 3년 만에 흑자가 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노동조합도, 저도 이 상하이차가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빼가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먹튀 자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하이차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방조 아래 기술을 손에 쥐고 유유히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상하이기차는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3000여 명의 노동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철저히 회계조작이라고, 회계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08년 9월 3배, 당기순손실은 7배로 부풀려졌습니다.

이러한 회계조작에 의한 법정관리, 우리나라 굴지의 회계법인 안진·삼일 회계법인 그리고 정부·산업은행·금융감독원·파산 법원이 공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세 번째 책임입니다.

네 번째, 2009년 국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으로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다목적 발사기를 들이대고 1년에 써야 될 95%의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뿌려 넣어서 신무기 실험장의 마루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MB가, MB 정권이 평소 갖고 있던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무너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네 번째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쌍용자동차는 2009년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매출로 경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전 정부의 개입 아래 노사가 맺은 약속, 3년이 지난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입혀야 할 책임,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책임입니다.

공지영 씨가 쓴 ‘의자놀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내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은 그들은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 가차 없이 팬다는 것이다, 곤죽이 될 때까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찾아간 것, 선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특별위원회 구성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구성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집권 5년을 상징하는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의 만리장성을 외면한다면 그 선의는 위선일 뿐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구두로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심상정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간단히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고됐던 분들의 복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에 마힌드라 찾아가서 그 부문을 추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이……

○**심상정 의원** 총리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요, 생각을 하셔서 대책 논의를 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창희**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은 오천만 국민 모두의 고향입니다. 전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농업과 어업 그리고 축산업은 시장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될 핵심 산업입니다.

이러한 생명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토는 아주 좁은 나라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한번 휩쓸고 가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시설물들이 망가지고 농작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27배나 감소하였고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는 1800만 원으로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빛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어민이 하루에 3명꼴로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피할 수 없는 다국적 FTA마저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더욱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는 것이고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우리의 농어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장관님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마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연구한 대안 정책을 놓고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농어민이 잘살아야 선진 국가, 강한 나라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합니다.

○**홍문표 의원** 감사합니다.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국가 전체 예산의 9%였던 것이 매년 줄고 줄어서 올해에는 5.6%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농림수산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 3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역대 예산편성 이후 최저인 4%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인들은 정부가 농어민을 우습게 알고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또 이것을 규탄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FTA 등 어려운 농어촌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5%대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낮아지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수지 뚫 높이기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서 농수산 식품의 예산 증가가 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농수산·어업이 홀대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식

량안보 차원, 그리고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가정을 할 때에 농수산 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적정 규모에서 유지되고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농어민이 홀대 받는다 하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또 그와 같은 설득, 소통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높여야 되겠죠?

○**국무총리 김황식** 이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총리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 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많은 국민과 농어민들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쌀값이 8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쌀값을 현실화시켜 주자 하는 것인데, 현재 쌀값 목표 가격이 17만 83원, 본 의원이 17대 국회에 있을 때 입법한 법인데요. 문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쌀 목표 가격을 17만 83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반 소비자 물가는 무려 23.5%나 올랐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오르는데 쌀 목표 가격은 8년 동안 그대로 묶어놨다면 이런 정책 때문에 농어민이 빚을 지고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해도 20만 9200원 정도는 이번 쌀값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6%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잉 생산이 되면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정부 양곡 재고를 잘 관리해야 되는 부담 등을 생각할 때 그렇게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바

람직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든지 또 가공 산업을 통해서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쌀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총리께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쌀이 2009년, 2010년에는 우리가 112%까지 수확을 했는데, 엇그저께 우리가 통계에 보면 86%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총리께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그다음에는 논에다가 쌀농사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은 복합영농으로 해결을 해야지 쌀 논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총리께서 간과해서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법을 전면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기계를 한 여덟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모를 심는 기계를 이앙기라고 그러합니다. 이 이앙기가 사람이 타고 조절하는 6인조식이 151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를 1년에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쓰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내년에 또 꺼내 쓰는 건데, 이걸 구입한 농민은 1년 열두 달 월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냅니다. 여기에서 농촌 농민이 많은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 임대법을 만들면 농민이 필요할 때만 농사를 지을 때만 기계를 임대해서 쓰면 비싼 기계를 농민이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정책을 과감히 정부가 획기적으로 농촌 농민을 위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과거에 이와 같이 사용일수가 적은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원인도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그

런 쪽으로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이득을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국적 FTA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FTA는 국익을 위해서 체결이 된 것이고 그 국익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FTA를 하고 보니까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그리고 동반성장, 사회적 기업정신으로라도 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본 의원이 6월 30일 날 발의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FTA 발효를 한 후에 3개월간 대미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 업종의 무역수지는 전년도 동기 대비 50.2%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수출은 약 1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어업과 축산업과 또 이러한 어업들은 사실상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리님께서 무언가 사회적 정신과 그리고 동반성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에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난번 한미 FTA 체결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만들었습니다. 그 액수가 24조 1000억에, 그리고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세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 자체 해서 총 54조 원 규모의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또 그 밖에 상황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살펴서 하여튼 농어업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홍문표 의원**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익 보는 산업이 있고 손해 보는 산업……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저희가……

○**홍문표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사회적 정신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를 우리가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문표 의원** 그다음에는 경색된 남북관계 및 통일은 농업 문제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의 한반도 식량수급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각 부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남북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통일 후의 식량대책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총리께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 이후의 한반도 식량수급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나름대로 관련된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은 해 오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 변화와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제적 실정이 식량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문표 의원**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 준 방법이 물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된다, 지난 과거 정부가 쌀·밀·비료·식료품 그리고 특히 소도 1001마리까지 북한에 보내 주었습니다. 이



것이 소위 햇빛정책이었고 퍼주기 식량 지원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폭탄, 총알, 핵개발 그리고 공갈·협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주민이 직접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반 시설을 현대화를 시켜 주고 그리고 영농기술을 전수를 시켜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 직접 이와 같은 것을 전수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북한 동포의 식량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세 번째는 식량 무기화 시대에 통일 후의 식량 문제도 남북이 함께 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성공단처럼 농업특구지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곳을 또는 유엔이 지정하는 장소를 개발해서 이런 식량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통일문제도 함께 걱정해서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농업 관련해서도 남북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활치는 못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와 같은 획기적인 방안, 정말 가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관계가 경색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 경색을 풀기 위해서 남북 모두의 협력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 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농업특구개발 사업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문표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이시네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홍문표 의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하는 전제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1년 만에 이뤄지는 충남도청 이전은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충남도청의 이전 사업은 충청권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서해안시대 국가의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동의합니다.

**○홍문표 의원** 충남도청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이 삼교에 신설 역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장래역이라는 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그런 역이 지금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이 지역주민들 세 번 네 번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하기로 해 놓고 한 번 와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하고 이걸 결정을 해 버리니까 지역민들이 그 예산 좁은 바닥에서 5만 6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국회와 정부에 지금 탄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역과 역 사이가 12km 정도로 이렇게 대충 하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그렇습니다.

**○홍문표 의원** 그런데 지금 24.4km가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을 비워 놓고 이것을 장래역이라고 한다면 이걸 뭔가 지역의 여론을 잘 안 들었고 또 뭔가 수렴을 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계서 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청 이전 수요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상에 이것이 장래 역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설 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용 수요 등을 한번 검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 시기는 좀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우선 안 맞거든요, 탄 데와. 그러면 균형도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관계서 각별히, 현장을 한번 와 보시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24km를 비워 놓고 탄 데는 12km씩 역 간을 만들어 준다면 이거는 지역, 이거야말로 확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차그마치 5만 6000명의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예산군,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로서 30만의 인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이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관님께서 깊이 이 문제를 다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충청남도청 소재지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예산결산 심사 시 총리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재완 기재부장관님께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창까지 와 있는 수도권 전철을 두 정거장, 즉 도청 소재지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토부차관에게 말씀드린 대로 30만의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두 정류장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은 뭐로 봐도, 경제성으로나 교통이나 그리고 행정이나 도청 소재지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총리님께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총리님께서,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도청 이전에 따라서 교통 상황도 변화가 되고 또 교통 이용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문제가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청사 신축비가 모자라고 또 진입도로 공사비가 모자라서 충남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전을 연기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청 신축비, 또 진입로 공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청권이 새로운 서해안 시대에서 아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열어갈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총리께서 국비에 관한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청사 건축비나 진입도로 공사비 이런 필요한 지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고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 부처들이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고맙습니다.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된다 그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홍문표 의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의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사회 안전망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곤경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더 고통을 받고 사회 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사회통합 촉진 차원에서 첫째, 땀 흘려 일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유력 대통령 후보 친척의 불법 주식매매 혐의 사건, 경제적 약자들의 참정권 제고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문제 그리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의 현실화 문제 그리고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회사의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병완 의원 혹시 대유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완 의원 대유신소재의 회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이고 박 후보의 조카인 한유진 씨와 그들의 두 자녀 등 4명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인데요, 대유신소재의 작년 6월부터 올해 최근까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박 회장과 그 가족이 박근혜 후보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편입되어서 천이삼백 원대 하던 주가가 금년 2월에는 4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조카 가족인 박영우 씨 등은 거래일 기준으로 올 2월 20일 최고점을 찍기 직전인 2월 10일 3500원대에 227만 주를 매도하여 약 8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후보 조카와 조카사위의 주식매도 과정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박근혜 후보 조카사위 박영우 회장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서 천삼사백 원대의 대유신소재 주식 21만 주를 장내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 회장의 주식 매집이 끝난 12월 7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대유신소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이후에도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2월에 발생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박영우 씨 등은 일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대유신소재 지분을 올 2월 10일에 227만 주를 주당 3500원대에 매도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화면이 관련 공시서류입니다.

그런데 거래일 기준으로 다음날인 2월 13일 대유신소재는 중요한 공시를 발표합니다. '결산을 해 보니 2010년에는 49억 흑자였는데 2011년에는

27억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공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장과 그의 가족이 무려 227만 주나 장내에서 매도한 다음날 회사는 주가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적자전환 공시를 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아 주가도 3배가량 올랐겠다, 적자전환 공시가 발표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적자전환 공시 발표 하루 전에 온 가족이 지분을 대거 내다 판 것입니다. 실제로 적자전환 공시 다음날 주가는 10%가량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의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회사이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병완 의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2월 13일에 있었던 적자전환 공시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거친 결과가 아니고 대유신소재가 자체적으로 결산한 뒤 발표한 공시였기 때문에 회장이라면 이 사실을 절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감원이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총 38건을 조사해서 24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24명 중에 이 박근혜 후보 조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를, 그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장병완 의원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뒤에 검찰에 이첩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본 의원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마는 대유신소재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서류만 확인하면 잡을 수 있는 주가조작 혐의를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했던 금감원이 조사조차 안 했거나 했더라도 아직까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봐 주기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로 관계기관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융위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병완 의원 본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기관에서 금감원에 질의를 한 결과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다’고 하는 시인을 이미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주식매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화면을 보면 박 회장이 밝힌 공시서류에는 매도 날짜가 분명히 2월 14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격이 약 3500원대로, 제일 낮은 가격이 3441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매도했다고 신고한 2월 14일 대유신소재의 주가는 3395원에 시작해서 최고가가 3445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500원대의 주가가 없었던 것이지요. 즉 말해서 2월 14일에 매도했다는 것은 허위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 매도한 날짜는 언제냐 하면 바로 또, 이들이 다른 자료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대유신소재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시한 대유신소재의 지분변동신고서를 보면 여기에는 매도 날짜가 2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도한 주식 수, 매도 단가 그리고 모두 박 회장과 그 가족이 신고한 공시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말해서 2월 10일 대유신소재의 주가변동 상황도 3970원부터 3380원까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3500원대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이 매도한 날은 공시한 2월 14일이 아니라 실제 2월 10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들이 이 날짜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생각, 잘 모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장병완 의원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

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은 상식을 가지고……

○장병완 의원 이게 금감원과 거래소에 공시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 더 파악하시면 그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장병완 의원 기본적으로 10일 날 이것을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루 뒤인 14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공시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따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지금 공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명백한 허위공시이고 미공개 정보에 의한 주식매매이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금융위원회에 알아봐 가지고……

○장병완 의원 이미 오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달리해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대선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병완 의원 정부에서 따로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치권, 국회 등이 논의를 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의원 최근 투표율이 총선과 지방선거는 한 40~50%, 대선은 60%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최근 제도적 개선은 보궐선거의 경우에 투표 시간 2시간 연장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들은 대개 어떤지 좀 알

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보다도 더 긴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의원** 본 의원이 23개국을 조사해 본 결과 6시에 마감되는 국가는 독일과 멕시코밖에 없고요. 프랑스도 6시에 끝납니다마는 프랑스는 일요일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일본, 스페인, 러시아가 8시, 네덜란드는 9시, 영국과 이태리는 10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상대적으로 또 부촌의 투표율이 서민 밀집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완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흔히 부촌의 대명사라고 하는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강남구 도곡2동인데요, 여기하고 서민들의 밀집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3동의 투표율을 제가 2007년 대선 이후 죽 비교해 봤더니 도곡2동이 평균 10%p 정도 높습니다, 투표율이.

이런 현상은 결국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80만의 비정규직, 590만의 자영업자들 중에는 아무리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일을 해야만 하는 인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투표 마감 시간인 6시가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등의 참정권 침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투표율 제고가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요소도 있습니다. 연장해서 얼마큼 투표율이 제고될 건지, 또 연장에 따라서 투표 관리, 또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면 정부로서도 그 입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병완 의원** 총리님 말씀대로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병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데요. 투표자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용 기준은 한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00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대폭 좀 낮춰서 역시 20대의 투표 참여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도 관련 규정에는 2000명이 일용 기준이되 그 미만의 경우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재자투표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병완 의원** 다음에는 태풍 피해와 관련된 농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불라벤의 강풍 때문에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만 해도 약 4372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약 28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총리께서 태풍 직후 피해 지역을 시찰하시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신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아픔과 피해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는 비농업인들과의 형평상 직접 피해의 구제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제대로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그건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현장에 가서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건의도 들었습니다.

○**장병완 의원** 문제는 정부의 이 피해복구 기준

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복구 비용이 총 어느 정도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400평짜리 한 동이요.

○국무총리 김황식 액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완 의원 제가 산정을 해 보니까 약 4000만 원, 적게 들어도 4000만 원 듭니다. 정부의 권장기준대로 규격대로 해서 복구를 하려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전과의 경우에, 비닐하우스가 전과됐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이 1048만 원입니다. 실제 소요비용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35%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66만 8000원입니다. 즉 말해서 총 복구 소요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복구기준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파손을 농민들의 개인 재산상의 손실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농업 생산의 인프라가 파손됐다 하는 것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가가 워낙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대해 정부가 정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못 듣고 있거든요.

이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총리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재난에 의해서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본인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비닐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재해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는 도시에서도 영세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균형,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보험 쪽에서 충실히 커버될 수 있도록 농어민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비닐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써 경제적 위기를 사회통합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통합 없는 경제성장은 진진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기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장병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T DNA가 살아 있는 지역,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IT 분야에 오랫동안 일해 왔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이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은희 의원 아, 예.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권은희 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장병완 의원님이 지적한 대유신소재 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던데요, 사실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께서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장병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그 회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하는 혐의가 있다는 측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허위공시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로 전환한 것이 지난해 2011사업연도의 3/4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가 돼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3/4분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4일 날 적자 전환한 것으로 공시가 됐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와 관련해서 5% 초과 대주주 그리고 그 특별관계인에 대해서 대량주식보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는 매매체결을 한 당일 기준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주주나 임원 등이 보고의무를 지고 있는 소유주식 보고 제도는 결제일, 그러니까 주식매매 체결한 다음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이틀 후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 건의 경우 대주주 등의 대량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금년 2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임원 등이 보고의무가 있는 소유주식 보고는 매매결제일, 그러니까 그것은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월 11일이 토요일이고 2월 1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틀을 빼고 그다음에 결제일과 체결일 사이 이틀, 그래서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 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이 해당 법규에 위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결국 위법성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이 요즘 세상에 친인척이라서 봐준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에 눈치를 보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뿐이지요.

○**권은희 의원** 최근 정치 관련 테마주가 사실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동안 저희로서도 금융감독원을 동원을 해서 그런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위계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금융위원회가 총리실 산하 행정기관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권은희 의원** 금융위가 이번 주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사를 간다는데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상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태가 생길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지금 금융위 이사가 예비비를 쓰는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금융위가 이전계획,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인지 또 예비비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희 의원** 저는 평소에 총리님을 존경하고 국정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권은희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산업계·학계·정부·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유독 박정희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뿌린 씨앗이 그 후대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3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였고 40명이던 정원을 2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78년에는 600명, 79년 800명, 80년 800명, 81년 600명의 학생들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인력을 육성하였고 4년 동안 2800명의 정원이 나왔는데요, 2800명은 한 학과 학생이 100명인 경우에 28년 동안 길러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미전자공단을 조성하고 대덕연구단지에 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해서 대규모 인력이 활약할 무대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인력들이 취업전선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TDX교환기를 자체 개발하게 되었고 고집적 반도체, 휴대폰 등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일층 노력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더구나 IMF 이후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0년대 중반에는 문과 대 이과 비율이 4대 6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을 보면 5대 5고요, IMF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서 2002년도는 이공계가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이때 신입생들이 이제 우리 산업계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항식**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 온 데는 이공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공계의 진학을 기피하고 심지어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을 외국에서 수입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공계가 이공계로 진출을 했을 때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든지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초·중등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이라든지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장학금·연구비 지원,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계속 더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도 보면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서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휴대폰도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는 1만 명 수준의 소프트웨어·디자인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서 R&D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사정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이공계 기피현상과 맞물려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기능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나 정원이 줄어들고 지원자 수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도 심각합니다. 국내 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평균 정원이요 2000년도에는 120명이었는데 2012년 현재 50명으로 급감하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나 카이스트 전산학과가 5년 이상 지금 정원 미달입니다. 사회진출을 했을 때 대접도 잘 못 받고 임금수준도 차이가 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지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평균임금이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직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유지하고 창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빅 데이터, 콘텐츠, 디자인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특허소송을 보더라도 소프트웨어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역특성화와 더불어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국내 정보통신 벤처의 지난 4년간 비중을 보니까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26.4%를 차지하다가 꾸준히 매년 감소해서 지금은 23.6%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IT 벤처업체 수는 증가하는데 전체 벤처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지적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IT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열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식은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융복합 시대로 가면서 기계 부분이나 기계부품 이런 부분하고 IT하고 연결되는데, 말하자면 기계나 부품하고 관련된 IT 부분들이 IT로 카운트되지 않고 이쪽으로 카운트되는 그런 분류기준의 사정이 변동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IT 관련된 벤처가 더 활발하게 나와야 우리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열의를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기술개발은 어쨌든 실력껏 하는데 상용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상용화를 능력껏 못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 그것을 원하는 기업에 팔아 주고 또 로열티도 받아 주고 특허도 유지해주는 어떤 기술거래센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벤처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이 있으면 뭔가 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또 출구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국무총리 김황식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권은희 의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결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이것을 특허로 창출을 해서 잘 활용하고 또 보호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지식재산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차원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총리님, 연말에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리님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워크는 이제야 거론되는 것 같던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연말이 아니고 다음주부터, 이번 주말부터 일부가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마지막까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서울하고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기에 어려움이랄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세종시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짓고 설비를 갖추어서, 말하자면 그런 제도를 기기들을 이용해서 여하튼 서로 대면해서 일 처리하는 이런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바꿔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분명히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면 어느 정도는 정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 체계를 잘 잡아야 우리가, 정부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잇따른 강력범죄,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CCTV 설치비율이 한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데요, 현재 CCTV 관리업무는 어

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CCTV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방법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재난 이런 것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CCTV는 설치하는 목적에 따른 기관이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통합센터를, 자치단체별로 통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후자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행안부에서 계획된 통합관제센터 계획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구 위주로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밑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지역별 허브를 만들고 그것을 다 연결한 우리나라 전국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우리가 범죄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 화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권은희 의원** 우리 MB 정부 초기에 3위이던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이 2011년 19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MB 정부에서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뭐 아시다시피 산업IT융합 분야는 지경부로 갔고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전자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로, 이렇게 업무 내용에 따라서 분장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경쟁력 지수하고 관련해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산정하는 그 기초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 어쨌든 이런 추세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경쟁력 추락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IT 분야 책임부처가 없어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부처로 크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오고 있었고 또 부처 간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야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부처 간에 업무 중복이나 갈등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총리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앞으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만 생각하는 어떤 담당 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진정한 지식경제, 창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권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정확히 판단하여 씨를 뿌린 지도자 덕택으로 산업화·정보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세계적인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GE 인텔 소니 등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혁신기업입니다.

정보통신이 효율성 제고의 수단이었던 산업경제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역인 창의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사회로서 소프트웨어 선도하는 창의경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재가 산업을 이끌어갑니다만 창의경제 핵심인력 양성이 미흡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특화하고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산학연이 연계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통신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정보통신 기반을 재정비하여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제2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747 공약으로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5년이 됐습니다. 온 국민이 부자가 됐다는 느낌보다는 일자리 교육 주거 사교육 노후 모든 문제가 불안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국제신용등급이 상승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영표 의원** 그리고 7, 8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이 됐다고 하고 또 무역수지도 안정이, 7월에도 계속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평가고 좋은 점이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그림자의 측면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뭐……

○**홍영표 의원** 그래서 대기업 쪽에 보면 총 자

산도 76%가 늘었고 매출액이 67%가 상승했고 계열사가 또 812개에서 1205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34개 국가 중에서 서른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하고 10만 명당 32명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혼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2193시간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44시간이 높습니다. 또 최저임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은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자영업자 수도 이 정부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전세차입금까지 포함하면 2000조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도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때 약속했었던 747 공약, 이것 거짓말이었지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이것은, 747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5년 내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한 겁니다. 가령 7은 7% 성장, 4는 국민소득 4만 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수로 2만 달러가 안 되는 국민소득을 5년 만에 4만 불대로 올리겠습니까? 국가비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은 세계 7위의 경제국가를 만드는 것을, 그것은 비전의 제시입니다. 그것은 비전의 제시이지 가령 어디에다가 뭘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홍영표 의원** 총리,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을 정확……

○**홍영표 의원**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747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5년 후에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면 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환상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국가……

○홍영표 의원 그것을 지금 무슨 비전이다, 공약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국민들께 저는 이명박 정부가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총리님까지 그것을 변명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변호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저도 이 정부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홍영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정말 747공약을 했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과연 그게 공약집에 공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총리님만 모르십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 정부의 소통이랄까 이런 점에, 말하자면 국민하고 충분히 그런 점이 합리적으로 소통이 안 됐다 하는……

○홍영표 의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747공약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공약이 아니고 비전을 제시하니……

○홍영표 의원 총리님 그때 어디 외국에 나갔다고 오셨어요? 왜 몰라요, 혼자만?

○국무총리 김황식 비전의 제시, 한번 그것을……

○홍영표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매년 60만 개에서 30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비전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홍영표 의원 몇 개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가령 예를 들어서……

○홍영표 의원 지금 20만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매년.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 않습니다.

○홍영표 의원 80만 개 만들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120만 개…… 오늘 오전에 기재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 따로 묻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년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어서 5년 동안 300만 개 목표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그것도 그러면, 그것은 뭘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것은 명백히 임기 중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고 그 부분이 달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왜 그러한 사태가 생겼는지를 질책을 하고 따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런 사항하고 또 아닌 사항하고는 구별을 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판단을 하면서 해 나가야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 생산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객관적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객관적으로……

○홍영표 의원 제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사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히 하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것이……

○홍영표 의원 총리님께서 어떻게 해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저는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하시지요.

○홍영표 의원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셔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고요.

기재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약은 300만 명이 맞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까지는 125만 명을 만들었지만 5년 동안 120만 명 정도가, 121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정부끼리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 때 했던 일자리 창출 숫자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다른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 이전보다 일자리 숫자가 더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선방을 했다고 자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그래서 역풍 속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기록은 국민들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지만 상대적 순위는 그런 대로 선전했다 그렇게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부의 일자리 통계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4분기에 보면 43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43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50대가 27만 명, 60대가 25만 명 그리고 40대 이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병석 부의장, 강창희 의장과 사회교대)

○**홍영표 의원** 15세에서 29세는 3만 명이 오히려 줄었고요, 30대가 7000명이 줄었고, 40대도 1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 43만 명 중에서 이 성장과 무관한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 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단시간근로나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이 평균 53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영업 쪽의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2년 동안에 10개 중에서 1개 살아남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래서 그런 쪽에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늘릴지 모르지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 아주 악

화되고 있고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절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평가는 '지금 목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일자리 문제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정부의 그런 어떤, 우리 장관님의 그런 안이한 문제 인식이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제가 그것 조금만 더 심층분석을, 저희인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분석을 하지는 않고요. 심층분석을 해 보시면 20대, 30대 이쪽은 절대인구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절대인구 규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 효과를 우리가 차감해서 분석을 해 보면 새로 생긴 일자리의 한 70% 정도는 40대 이하에서 생긴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다 하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구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예컨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다른 한편 상용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봤을 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의 비율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좀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양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질적으로는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 반가운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질적인 측면에서 좀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동의합니다.

○**홍영표 의원** 여전히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만 소위 취업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소위 니트족 이게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고요.

○**홍영표 의원** 제가 사실은 그런 쪽의 답변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저는 이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우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새로운 어떤 문제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과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

데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약 10년 전에 한 14%였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지금 8% 또 전 산업으로 하면 10%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또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저는 경쟁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비해서 또 보면 대기업의 최고위층의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급여는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저기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업 100대 회사와 중위권에 있는 중소기업 CEO 그리고 일반 근로자 이렇게 임금 추이를 보면 그렇게 최고위층 최고경영진의 임금은 급상승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런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정부에서 앞으로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상액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공개하고 또 상세한 보상정책을 공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 지적하신 점에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체로 인력절감형 투자 쪽으로 이행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경쟁을 하면서 기술집약적으로 또 투자집약적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를 마냥 막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너무 인건비 절감에 몰입하다 보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2010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의 폐해에 주목하면서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조달·금융·조세 정책 등을 모두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력의 중요성 쪽과도 맥이 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적해 주신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불법과건이나 사내하도급 같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

년 연장 또 사회보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사현장에서 애를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또 대기업의 정규직의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쪽과의 그 차별 문제를 완화하는 그런 문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 문제와 함께 접근이 병행이 되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님 오늘 안 오셨지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장관님한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안 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차관님이시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인천의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아시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홍영표 의원** 화면을 보면 아실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2030년까지 제3연륙교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장관님께서 인천경영포럼에 참석하셔서 가지고 ‘기존 도로만으로도 공급은 충분하고 조속히 제3연륙교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적절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여전히 국토해양부는 그런 입장입니까? 2030년까지 제3연륙교는 과잉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공급량, 교통량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는 충분한……

○**홍영표 의원** 그러면 우선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라는 이것을 제가 즉 추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지.

화면 보이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홍영표 의원** 글씨가 좀 작은데요. 91년도부터 제3연륙교 계획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무튼 이것을 죽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는 2006년 5월 4일 날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하는데 이때도 제3연륙교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맞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홍영표 의원 맞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

○홍영표 의원 그러니까 제3연륙교를 2006년 5월 달에도 하겠다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우선, 사실 자체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인 도시 발전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 아무튼 정부는 '91년도부터 제3연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2003년입니까? 2003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3연륙교 사업 착수를 위해서 영종하늘도시 2000억 원, 청라지구 3000억 원, 이것 토지 조성 원가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까지 받았지요? 이것 사업 승인을 어디서 해 주었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당초에 개발계획……

○홍영표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당초에 개발계획 출발할 때는 저희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인천시에서 나갔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래서 제3연륙교를,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5000억을 받았습니까, LH공사가.

그것은 맞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랬는데 지금 그 LH공사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리고 이 제3연륙교라는 것이 이미 '91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경쟁 시설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뺏니까, 정부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 비용 때문에 그것을 인천시가 부담해라 이런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민자도로실시협약에 보면 대안이 되는 그런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연륙교를 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자 하는 인천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천대교에 이런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2005년도입니다. 건교부에서 이미 인천대교에 대한 허가를 내 주었다가 연륙교에 대해서 이렇게 건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천대교 이쪽에서 로비를 받은 겁니다. 건교부가. 해서 갑자기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는 연륙교를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책임을 인천시에다 갖다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을 할 때는 재무적 투자자하고 건설을 하는 투자자가 동시에, 대개는 같은 회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재무적 투자자하고 건설하는 건설투자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재무적 투자자하고 개략적으로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투자자하고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하고 달라져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번과 같이 투자 유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실 보전하는 것은 비단이 건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홍영표 의원** 저는 그 제3연륙교가 전형적으로 정부의 그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을 전제로 해서 돈까지 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서민과 중산층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 의원님 말씀에……

○**홍영표 의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의원님……

○**홍영표 의원** 제가 지금 다시……

제가 말씀하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91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계획을 가지고 영종도 신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을 가정해서. 그런데 갑자기 2005년도에 인천대교라는 경쟁시설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든요.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국토해양부가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모든 책임을 인천시나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지금 인천대교주식회사의 주주로 인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 주주는 거기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맥 퀴리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현재 6%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인천시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연륙교가 건설이 되면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손실보전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인천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천시로 하여금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가 수 없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그……

○**홍영표 의원** 일단은 공사를 시작을 해도 5, 6년 걸리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일단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일단……

○**홍영표 의원**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인천에 와 가지고 ‘2030년에 가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차관님 답변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교통량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건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전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홍영표 의원** 그러면 2030년 아니더라도 인천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할 겁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인천시하고의 안 그리고 또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합의가 되면 공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영표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와 가지고 ‘2030년에 건설할 거다’, 이미 LH공사 통해서 500억 다리 공사 건설할 것을 거기 입주민들한테 다 받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을 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창희**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국민적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직 재벌과 1% 부자만을 위한 줄푸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망국병입니다. 줄푸세는 1929년 대공황을 초래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며 오늘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근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푸세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 장관들에게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하신 답변을 보다 보니까, 747이 공약이 아니었던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비전이라고, 국가 발전의 장기적인 목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확인해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홍종학 의원**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비전을 얘기하면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군요?

○**국무총리 김황식** 공약집에 공약으로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실천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더 큰 대한민국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년 동안 1인당 GDP를 어떻게 두 배 이상 늘립니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비전……

○**홍종학 의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747을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증거가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74

7……

○**홍종학 의원** 그리고 5년 내에 그렇게 달성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면, 그러면 책임지실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5년 내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딱 했다고 한다면……

○**홍종학 의원** 그러면 그것 확인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종학 의원** 좋습니다.

오늘 참, 747이 공약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요,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실까 궁금합니다.

경제민주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은 법과 정부보다 위에 있고 국민과 국회보다도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가 총리보다 높다는 말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민주사회에서 높고 낮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홍종학 의원** 그런데 왜 재벌 총수들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해도 안 나오지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어떤 사안의 어떤 경위로 증인을 했는가 그것은 알 수 없는, 개별적인 사정을 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무조건 그게 옳다 그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국회에도 안 나오시는 재벌 총수들 잔치에 총리께서는 자주 가지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가지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사진이 있던데요, 총수들과 같이 사진 찍은.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취임 초기에 전경련 회장단의 어떤 회의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예,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늘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경련에 가셨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전경련에서 초청하는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요. 국회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경련에 초청한다고 가신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정부가 발주한 공공계약이 재벌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른바 대기업 집단에, 정부 계약량의 약 35% 정도 수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정부가 재벌들에게 R&D 자금 지원 얼마나 해 주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는 한……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정부가 재벌들에게 세금 얼마나 감면해 주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액수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지금 총리께서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것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어떻게 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그래서 내가 정확히,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제 기억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종학 의원** 이런 자료는 총리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필요하면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죽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 이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국세청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습시다. 2주 만에 자료를 받았습시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이 정부에서 여태까지 만들지 않았습시다.

재벌에게 얼마나 특권·특혜가 제공되는지 이 정부에서는 살펴보고 하지 않았습시다. 법인세를 신고한 우리나라 총 법인 수가 44만 개입니다. 그중에서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 대기업에 2010년까지 3년간 10조 8000억 원,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습시다.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종의 대기업에서 조세 감면이 많이 된 것은 아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그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 온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하자면 R&D라든지 또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과정의 결과이지 이 정부가 새삼스럽게 재벌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아닙니다.

○**홍종학 의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도입하질 않았어도 이 정부 와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벌에 대해서 특권·특혜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게 경제 민주화의 첫 과제인데요. 그러면 총리께서 이런 자료는 꼭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에서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재벌한테 얼마나 특권·특혜가 가는지, 이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으니까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가에 어떤 제도·정책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 관련해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꼭 그러면 재벌 관련된 통계 확인해서 매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았습시다. 어르신들이 용역들하고 몸싸움하고 폭행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시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야만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전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지역주민 특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이랄까 또 건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염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홍종학 의원** 그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력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저기가 안 되잖아요? 총리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어르신들 한 번 방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걸 제가 직접 나서는 문제보다도 우선 한전이 당사자고 또 지경부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령 이걸 어떤 한두 마디의 교섭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결정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재벌 총수들은 만나시면서 우리 밀양의 불쌍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번 찾아가서 뵈 수도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벌 총수’, ‘재벌 총수’ 하시는데요. 물론 재벌 총수도 만나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은 재벌 총수 한 번 만난 것보다는 수백 번, 수천 번 만난 것입니다.

○**홍종학 의원** 지금 총리님 집 앞에 주차장에 76만 5000V의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보상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지만 보상하니까요. 이게 타당한 법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국회에 아마 의원입법으로 누가 제기하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가 미흡하면……

○**홍종학 의원** 그러면 일단 중단시키셔야지요,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 유효한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일단은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지요.

○**홍종학 의원** 그렇게 법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이 이걸 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했습니까? 그렇게 법을 중시 여기는 분들이 2010년 8월 15일 10여 명의 재벌총수를 사면복권했습니까?

억울한 서민들은 ‘출푸세’의 위세에 법질서 세운다며 무참히 짓밟으면서 재벌총수들에게는 관

대한 것이 이것이 이 정부의 법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 사면제도의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도 있었고 선거법 위반 등 정치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 왔습니다.

재벌총수만이 사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제도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8·15에도 일체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사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 누대의 정권에서 행해져 온 일이지만 그동안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반성적인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우리 역사에 한 명만 이렇게 사면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제가 두 번째로 찾은 민생 현장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종학 의원**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홍종학 의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홍종학 의원** 이것도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소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근처 상인하고 마트 설립자하고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도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알아봤고 또 지경부장관이나 중기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또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종학 의원** 이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

는 것 아닙니까?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니까? 기업한테 지금 법으로만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회에서 강력한 규제입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조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확실한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절충을 하고 양보를 하는 그런 것을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존권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가 법만 앞세우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닌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곳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경부나 중소기업청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조정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기업들이 이렇게 뺏기고 있는 것이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친재벌·친기업 규제완화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아니지요. 예전에는……

○홍종학 의원 왜냐하면 이 기업이 영국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서만 지역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들어갑니까,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한국적인, 한국에 정해져 있는,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국에 정해져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의 방침이 영국에서 한국에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강북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5월부터 지금까지 6명의 주민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일인데요, 그런데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다,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복지가 대폭 확대되고 복지예산이 금년에 89억이었습니까? 또 역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제일 높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0~2세 보육이라든지 누리과정의 확대라든지 또 각 부분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복지의 수준은 높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에 예산액도 제일 많고 차지하는 예산에서의 비율도 제일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게 OECD 국가의 최하위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홍종학 의원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우리가, 가령 우리의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이 한 20% 미만 아닙니까? 20% 수준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세가 60%에서 29%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우리는 10%인데 거기는 25%, 그렇게 많은 세금을 이렇게 하니깐 그만큼 복지수준이 높은 거고 우리는 부담이 적으니까 그에 맞게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한다든지……

○홍종학 의원 지금 세금 부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이게 옳으신 얘기냐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복지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종학 의원 아니, OECD 최하위 국가가 ‘지금 복지국가라 해도 이제 괜찮다, 이제 과언이 아니다, 복지 많이 했다, 최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홍종학 의원 지금 총리께서도 지난번 6월 달

에 제주에 가서 가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포플리즘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이거 복지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령 스웨덴의 경우에 우리는……

○홍종학 의원 그러면 포플리즘이라는 게 뭐니까, 지금?

○국무총리 김황식 포플리즘이라는 것은……

○홍종학 의원 감세가 포플리즘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세도 또는 증세도 포플리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증세가 포플리즘이예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 말씀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서 물으시지요.

○홍종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세가 포플리즘이냐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종학 의원 포플리즘 얘기하신 저의가 뭐냐고요? 복지입니까, 감세입니까? 규제완화, 포플리즘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포플리즘 아니지요.

○홍종학 의원 규제완화는 아니예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부담하는 이러한 조세체계 안에서 그에 합당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조세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어떤 복지정책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빚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가져오고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이전이라도, 당장 5년, 10년 후에라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나라 정책을 해 나가야지 이 균형이 안 맞을 때 안 맞는 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저는 포플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부자 감세하는 거, 그러면 포플리즘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종학 의원 부자 감세해 주는 거는 포플리즘 아니고 복지 늘리는 거는 포플리즘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자 감세해서 돈 없어서 복지 못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괜찮고 줄푸세하는 거는 괜찮고……

○국무총리 김황식 부자 감세가 포플리즘이라는…… 부자 감세는 나름대로, 부자 감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의 전반적인 감세, 왜냐하면 아까 기재부장관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조세 감세의 효과가 가령 64조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홍종학 의원 처음에는 60%가 부자 감세였습니다. 그거를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자 감세, 처음에 그것을……

○국무총리 김황식 어쨌든 서민이나 중산층 이하에서 감세 혜택을 받아 왔고……

○홍종학 의원 감세 혜택을 덜 받았잖아요. 40%밖에 안 된다니깐요, 처음에 얘기한 게? 그게 부자 감세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OECD에 한국 조세제도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세,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낮춰라, 간접세는……

○홍종학 의원 아니, 지금 세목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요.

○홍종학 의원 지금 말씀하세요. 부자 감세가, 포플리즘을 얘기하시는 분이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지금 안 가하시니까, 단서를 안 다시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부자 감세는,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그거는 조세 감세다, 전반적인 조세의 감세다, 그리고 그 목적은 법인으로 하여금, 또는 감세에 따른 그것을 투자나 소비에 지출토록 해서 그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세금이……

○홍종학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서민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부자 감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요. 왜냐하면 감세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어떻게 그게……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재벌 편향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의 현 시각이 그렇게 부자감세하면서, 지금 얘기가 복지에서 비난하는 것 이견 전경련의 시각이고요.

지금 이 유로 위기에 대해서 자꾸 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나라들이 규제 완화 때문에 이 유로 위기를 맞았고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영상자료를 보며)

GDP 대비 총 세금 수입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 이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재정 수입이 낮은 것은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법인세 세금 감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세금 감면해 준 거요. 저기 한번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보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고서 이 위기를 맞은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 보여 드릴게요.

여기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고서 부동산 가격만 뛰고 그리고 나서 공공의 역할은 없어지고 이러니까 재정이 부족해지고 세금은 안 걷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만날 복지 얘기만 하시고,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재벌이 얘기하고 재벌에 편향적인 언론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남유럽과 북유럽에 오늘날이 차이가 나는 그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양 지역에 있어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남유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든지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였다든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이 부족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북유럽과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도 다 근거는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양 지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정책 —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것 — 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의 위기는 줄푸세 때문입니다. 줄푸세와 복지에 대한

그런 편향적 시각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9년 6월 15일 라디오연설에서 ‘부자감세라고 자꾸 비판하는 데 그게 아니라 감세의 70% 가까운 혜택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사실입니다.

○홍종학 의원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기재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시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지금 63조 8000억 자료고요. 그 세목을 달라 그러니까 2008년도 개정된 것이 저렇게 나옵니다.

2008년도 개정된 세금 감면 효과가 88조 7000억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고소득층이 52조 1000억이다, 이게 기재부 자료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사실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사실이고요. 저 자료가 아마 제 기억에는 누적법으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2008년, 2009년까지 세법 개정 효과가 EITC 확대라든지 유가보조금 환급이라든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있어서 저소득 계층과 중소기업 세율을 먼저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중산층 세금을 깎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 2008년 자료는 처음 하기로 했던 스케줄대로 죽 갔더라면 나왔을 누적법을……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요. 2008년 처음대로, 알고 계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의원님 아까부터 보니까……

○홍종학 의원 기재부는 알고 계셨지요, 이것이 부자감세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께서서는 답변을 다 안 들으시고 중간에 자르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홍종학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확인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의원님 질의시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홍종학 의원** 아니, 무슨…… 지금 제가 중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순액법과 누적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2009년……

○**홍종학 의원** 지금 설명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2008년도 자료화면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도 자료화면에 의하면, 이 계획을 할 때 기획재정부는 이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2008년도에 모르면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오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오히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쪽 감세가 더 많았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차이를 제가 설명……

○**홍종학 의원**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게 빠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건 2009년 6월이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중간에 말씀을 자르셔 가지고, 지금 귀담아듣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 말씀을 놓치시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요. 장관님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2008년도에 저 세제 개편을 했을 때 부자감세라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때는 부자감세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홍종학 의원** 저 자료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자료는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저 자료, 순액법으로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홍종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이번 2008년도 날치기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부자들한테 60% 돌아간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순액법하고 누적법의 차이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부자감세가 극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 부자감세였는데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부자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정확하다 이런 말씀……

○**홍종학 의원** 그때는, 2009년도에 세법 개정은, 이미 통과되기 전이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때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 어떻게 70%입니까, 지금 장관께서 얘기한 것도 50 대 50인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따로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순액법과 누적법의 차이고, 하나는 당시 세법 개정 효과로 즉각 효력이 발현된 것과 이후 세법 개정이 잠깐 순화가 돼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가 저렇게 생긴 거다, 두 가지 요인에 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러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5년 해서 나온 거잖아요. 왜 자료를 속이세요. 5년 해서 나온 게 지금은 50 대 50이고, 2008년도에는 60 대 40으로 부자감세였다, 그게 기재부 자료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둘 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거 설명을, 표를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요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저게 5년간 60% 가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누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누적으로 하면 5년간 약 한 육십삼사% 가까이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게 돼 있었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도, 기재부 자료도 부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재부 자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기재부 그 자료는 그러면 대국민 자료고 저건 속에 감춰 있는 자료예요? 이번에 처음 나온 자료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준에 따라서, 하여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5년간 감세에 의해서 63조 8000억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중 51%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귀착이 되었고, 48%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착이 되었다, 나머지 0.4%는 이렇게 뭐 굳이 분류하기가 곤란한 계층 쪽에 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이 2008년부터 12년까지 누적해서 나타난 총 효과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어떤 시점에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순액으로 보느냐 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2009년 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70% 숫자는 정확하다, 그렇게 제가 그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정부는 2008년 부자감세를 통한 귀착효과가 부자감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귀착효과의 세부 자료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도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재벌 총수를 국회로 부릅시다. 재벌 총수들이 우리와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없다면 재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뒤늦게나마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의제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경제 하나만은 살리겠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망쳐 놓았습니다. 원인은 줄푸세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법질

서, 이 줄푸세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줄푸세의 원조 박근혜 후보는 정반대의 의미인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줄푸세 시즌2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선거를 위한 몰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진정성이 없는 사탕발림공약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을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삼척동자도 안다고 합니다. 정녕 그렇습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발의해 놓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열 분만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결함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홍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남구 출신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熙國 議員**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남구 출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입니다.

흔히들 요즘 시대를 불만·불안·불신의 3불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3불 중에서 첫째로 모든 업체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실적공사비제도와 최저가낙찰제 제도 문제, 둘째는 주택거래 부진과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金熙國 議員** 실적공사비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종전 표준 품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회계 예규와 대통령령을 바꿔 가지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해서



지금 한 2254개 공중에 올 8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명목상으로는 장관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아닙니다. 계약내역서상의 계약 단가입니다. 이 계약 단가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원가보다 낮게 써 낸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차기 공사 예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원청자나 하청자나, 특히 자재나 장비나 인력 공급업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끝이 없는 대패질이다, 결국 0으로 회귀될 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정부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나 제3자는 ‘그것은 회사의 잘못이지 정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응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투입했거나, 고정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라 하더라도 수주를 하지 않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응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순의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공정, 소위 갑을관계를 빗대 가지고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金熙國 議員** 을이 죽어나는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갑이 정부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수청탁재기원(流水淸濁在基源)’이라고.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흐린 것은 원천에 달려있다, 갑에게 달려있다. 길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아 터지는 이 무자비한 불공정 행위는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30만 정도 되고 이들 가족을 2.5명으로 환산하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종전에 사실 표준품셈에 크게 의존을 하다 보

니까 누구든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와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이 등한시되는 문제점에 착안해 가지고 거래실례가격과 실적공사비적산제 등으로 보완하는 그런 안이 제기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전히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이라 할까요, 그런 여건 하에서 어쩌면 이게 출혈 경쟁으로 내몰리는 그런 핵심요인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문제점 등에 대해서 올 5월인가에 개선방안을 한번 발표를 하고 또 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이 점에 대해서 생생하게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나치게 이상만 쫓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실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 또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저희들이 극대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기술경쟁 등을 유발해야 되는, 그래서 원가절감을 하고 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좀 더 유리한 입찰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론에 대해서는 저나 모든 업체들이 공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제도로는 그런 입법취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도 제값 주기 운동을 하는 마당에 정부가 원가만큼 안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와 정반대로 모든 업체들을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즉 공공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이윤도 없이 낙찰을 받게 되면 저가로 받은 낙찰을 고가로 하도급을 줄 수도 없고 또 하도급 받은 업체가 고가로 자재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나 하청업체가 아니고 맨 밑바닥에 있는 노무를 공급하는 사람, 장비를 대는 사람, 자재를 대는 사람, 심지어 음식을 대는 사람까지도 제값을 못 받는

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민원의 본질입니다. 그 점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 질문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정말 실적공사비적산제라든지 엄밀한 의미의 최저가낙찰제는 아니지만 저가심사에 기반한 최저가낙찰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을사조약과 같은 이런 다단계 하도급구조 내에서도 갑을관계 사이의 약탈적인 도급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비난을 최저가낙찰제 또는 실적공사비적산제에다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다른 대안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운찰제로 가자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책임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말씀대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왜 원청사는 하도급한테 제값을 안 주는지, 왜 하도급 회사들은 장비나 자재업체한테 제값을 안 주는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수청탁제기원이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국토부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金熙國 議員** 장관님, 제값을 안 준 물건은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제가격입니다. 특별한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 무리한 경쟁에 의해서 덤핑낙찰로 업체들의 수익성 불안정은 말할 것 없고 또 시공 자체도 품질이 아주 나쁩니다.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또 재하도급업체들의 도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공사를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격을 주는 것이 상식이고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고집하면서 대기업들이나 원청사보고는 제값을 주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규제가 원청사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金熙國 議員** 그 사람들은 무슨 돈을 가지고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값을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정부로부터 제값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현재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2009년에 낙찰률이 70% 초반대에 있던 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74% 남짓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답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마는 저가낙찰 때문에 부실시공이 생기고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부실시공을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저가투찰을 하는 것인가의 인과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문제점의 고리를 어딘가에서 차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저가낙찰 때문에 부실시공이 있다고 본다면 저가낙찰 자체를 보완하는 그런 방안이 옳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등까지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장관님, 지금 명목상 최저가낙찰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예를 들어서 금번에 인천국제터미널의 경우에 26개 업체가 썼는데 1등부터 12등까지는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실적공사비로 심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말만 최저가낙찰제고 실제로는 최저가낙찰제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의회와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의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제가 무책임하게 ‘제도를 바꾸겠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선진형 입찰제도, 낙찰제도를 생각하면서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金熙國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개혁이지만 한 국가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실적공사비제도나 최저가낙찰제도가 계속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발주제도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시다. 나라의 틀을 바꿀 담대한 생각을 국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만희 차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흔히들 부동산으로 일컬어지는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스페인 등에서도 비중이 참 큰 분야입니다. 현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통해서 10년간 80만 호 임대주택과 70만 호의 분양주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 정책이 시행되고 4년 반이 됐습니다.

차관님, 지금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집값 안정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기회를 높였다는 것이 있고요. 또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섞어서 지으니까 소셜 믹스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또 있는데요.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대기수요가 되면서 민간의 주택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전세수요를 늘렸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노무현 정부 5년 내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4년 반 동안에 주택정책에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아무래도 주택시

장 안정과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최근 언론에서는 ‘발표만 하는 정부, 손 놓고 있는 국회, 부동산대책 시장을 잃었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반 동안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렇게 많은 대책을 세웠는데도 그 당초 취지대로 시장이 작동 안 하는 이유가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세웠는데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 안 시켜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러면 현재 정부가 제안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빨리 통과시키면 시장이 정상화될 걸로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물론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도 동시에 개선이 돼야 되지만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장안정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議員**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2006년 말에서 2007년 고점을 찍고 지금 한 5~6년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울이나 경기 요지에 시장가격보다 싼 아파트를 대량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그 아파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착공한 주택은 분양과 임대 각각 몇 채 정도 됩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2009년부터 저희가 공급을 해 왔는데 현재 착공된 것은 7만 3000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분양주택이 4만 5000호, 그리고 임대주택이 2만 8000호 착공이 됐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3년 반 가까이 됐는데 10년

동안 150만 호를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저희가 150만 호 건설하겠다는 그 원칙은 계속 유지해 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구체적인 건축 물량은 다소 좀 조정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정부는 주택시장의 3대 문제인 첫째로 거래 부진,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셋째로 주택가격 하락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 거래도 위축이 되고, 그것이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연쇄적으로 다른 이사업이라든가 인테리어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역시 거래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金熙國 議員** 오늘 제 기억으로는 아마 현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대책 같은데 취득세 양도세를 일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제의 부담이 상당히 위축 요인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熙國 議員** 저는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들은,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거래가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아무래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가구라든가 이런 변화가 많습니다. 베이비부머들도 은퇴를 하고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택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싼 주택을 계속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관님, 2011년도 정부 주택공급 계획물량은 몇 호였는데 실제 몇 채나 지어졌습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2011년도에 저희가 주택을 40만 호 사업승인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사업승인이 난 것은 55만 호가 되었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렇습니다.

주택거래는 부진하고 가격도 하락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보다 10만 채나 더 지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이것이 저희가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에서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에 따라서 공급이 있었고요.

둘째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당초에는 43만 호 건설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이뤄진 것은 37만 호 내지 38만 호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부진했던 건설이 2011년도에 반등하는 그런 작용이 있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국민은행이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2008년 7월 이후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는 13.5% 올랐지만 그 중에 서울이 약 5%, 경기도 6.4%, 특히 수도권인 용인이나 수지가 18%, 김포 16%, 성남 분당이 15% 떨어졌고, 전 부 하우스 푸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발생되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지역별로 주택공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남양주시, 수원시, 김포시, 인천 서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金熙國 議員** 결국 이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은 공급과잉이지요?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그것이 두 가지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용인이라든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로서 이미 주택가격이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김포라든가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좀 어떤 면에서 과잉공급이 되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택으로 인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트홈의 꿈이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었고, 거래 실종으로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중과,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및 거래세금 완화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둘째로 주택가격의 결정 요소인 수요와 공급 중 수요 창출을 위한 제반 노력, DTI 보완,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도 특정지역의 거래 부진 및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 공급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이제 주택정책은 국가에서 시장, 즉 민간으로 큰 축을 전환하십시오.

주택 분야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시장성이 없는 임대주택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서 공급 물량 및 시기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담당토록 하여 미분양이 되더라도 민간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오늘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100% 감면, 취득세 1% 감면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미분양 주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생기더라도 그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이원화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적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부에서는 주택매입기금 조성, 즉 은행이나 정부가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사 준 뒤에 다시 임대해서 살게 하고 몇 년 뒤에는 팔았던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권리를 주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은 원칙과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택시장도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 원칙을 우선시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는 우리 모두가 공동 부담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에 일이 생길 때마다 두고 결의를 다졌다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진다라는 문구처럼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과 책임은 국회가 부담하고 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을 여야가 같이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희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을 출신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줄곧 남북관계 경색은 안타깝지만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남북교역 실적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분명히 전 정부에 비해서 이 정부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경협 규모도 전 정부보다는 확실히 줄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의 현황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 2년간 1631개 기업이 남북교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 5·24 조치 이전까지 1204개로 줄었고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고작 191개에 불과합니다.

남북교역의 규모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46억 6675만 불이었던 남북교역량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2억 3956만 불 규모로 52%나 줄었습니다.

5·24 조치로 남북경협은 최악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남북경협 중단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남북경협이 축소됨에 따라서, 특히 5·24 조치는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의 사망사건, 또 2009년도의 핵실험, 또 천안함 폭침사건 이런 것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조치 아닙니까?

그 조치로 인해서 남북경협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북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종전에 남북경협사업에 관여했던 우리 중소기업에도 나름대로 피해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정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고 바로 우리 중소기업입니다. 경협에 참여한 우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궤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협에 참여한 1017개 중소기업 중에서 400개 이상이 폐업을 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금강산 지구, 평양 내륙지역에 있던 800여 개 기업들이 이미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남북정책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상생공영한다……

○전정희 의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또 상호……

○전정희 의원 상생과 공영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공영, 상호호혜…… 예.

○전정희 의원 그런데 이처럼 경협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을 줄줄이 도산시키는 정책이 과연 상생과 공영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종전에 남북경협 사업을 했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실태를 분석을 해서 특별 대출을 한다든지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등등의 나름대로 도와주는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른 손해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말하자면 일련의 북한의 과도한 그러한 행위들이 국민 정서상 그러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경협을 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을 북한 측에서 제공하는 것도 유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북한의 책임을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 10·4 선언 이후에 당시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남한에 55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던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로 오히려 9조 973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경제적 유발효과의 손실은 2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제시하는 그러한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이 자리에서 표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전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우리 혜택이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모든 문제를 다 떼 내고 경제문제만으로는 접근할 수는 없는 그러한 과정에 생긴 불가피한 조치가 5·24 조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긴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국가 전체가 함께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남북경협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최후 목표인 통일에까지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도입했던 것이지요.

일자리 정책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결과를 나타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매년 60만 개씩 5년 동안에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만든 일자리는 80만 개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는 5·24 조치로 잃어버린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5·24 조치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도산한 업체의 수 그리고 각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수를 곱하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종사자가 16명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6400개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협력 및 하청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5·24 조치로 북한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도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을 입었고 그렇기에 말하자면 북한의 내수에도 부족한 무연탄을 외부에다 가서 파는 등 그런 북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근본적인 어려움이고 그것이 5·24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경협이 축소·중단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이 입은 손실은 1조 849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주목할 부분은 이 기간 동안에 남북교역 감소액이 8404만 달러였던 반면에 북한과 중국의 교역 증가액은 36억 5521만 달러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본 손실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대부분 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 고통을 주겠다고 경협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손실을 보전했고 우리의 중소기업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이 남북경협 사업의 중단으로 일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돌파구로서 중국과 교역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중 간의 무역의 규모나 구조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액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반영된 결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교역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국과의 더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북한의 학습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긴 안목으로 접근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시각이 대단히 위험하고 안이한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할수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져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최근에 중국이 북한의 두만강과 접해 있는 두만·훈춘 일대의 노동자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고 단둥지역에도 연간 2만 명을 산업연수생 형태로 취업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또 러시아에 많이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정희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우리 기업들이 세운 임가공 공장에서 일을 했던 숙련공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련시킨 북한의 노동자들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양 남포지역에 진출한 300여 개의 시설에 중국 기업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독차지하면서 북한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상황, 이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북한의 일정 부분 책임을 이야기

했구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안위와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 단계를 풀어서 그야말로 상호호혜,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를 만들려고 우리 정부로서도 말하자면 큰 원칙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전정희 의원** 예, 모범답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그야말로 무조건 북한을 배제를 하고 경색관계를 계속 강화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정희 의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8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봉쇄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것이 얼마 정도까지 확장 확대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제한 대상은 북한이 아니고 남한의 중소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우리의 중소기업을 초토화시켰고 북한과 중국의 경협시대를 오히려 활짝 열어놓은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경협 봉쇄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그런 고초와 애로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협이 축소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일자리를 잃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다른 목표, 정책과 틀에 관련해서,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부득이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북한도 좀 진전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우리가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향후의 남북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경분리의 원칙이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남북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의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경분리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부분 부분별로 그렇게 딱 구분지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그야말로 경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경협을 정경을 분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국가정책이나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엄격하게 또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지혜롭게 국민의 뜻을 모아가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경제부차관 나와 주시지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서 지식경제부의 역할이 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의 역할과 임무는 남북 간의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요.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대북 교역과 투자에 대한 애로 해소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전정희 의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의 남북경협에 관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에 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금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부의 역할은 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제외한 인력 정도,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주로 마케팅비라든가 또 남북경협을 위한 그런 포럼 운영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 기금을……

○**전정희 의원** 지경부에도 남북경협팀이 있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5·24 조치 이후에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24 조치 이후에 남북경협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남북경협팀도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전정희 의원** 그런데 차관께서는 남북산업자원협력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중기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인 데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전정희 의원** 과연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적인 자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련된 일부 기업 지원에 관한 것 또 정책 수립에 관해 필요한 그런 운영비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그것은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통일부와 지식경제부 간의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희 의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협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의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이 단지 개성공단에만 영향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 경제에까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그러면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저희들도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남북경협체들의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운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의 어떤 범위라든가 피해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런 지원은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차관께서는 남북경협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북한 인건비도 싸고 또 여러 가지로 언어 문제, 장벽도 없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경영 체고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등에 나가 있는 기업들까지 유턴을 하게 될 때 개성공단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경부는 해외자원 개발에도 관심이 있으시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전정희 의원** 1년에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저희가 지금 민간 기업과 또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십 조의 그런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잠재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지금 북한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또 경쟁력 있는 지하자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에 개발할 만한 경제성 있는 자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발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전정희 의원** 일반적인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7000조에서 1경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우리나라는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의 자원 개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연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보에 대한 입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제도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남북경협을 아까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중소기업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24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저희가 민간에, 상공회의소도 한 적이 있고 통일부도 한 세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고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났는지 그 부분은 어느 쪽이든 지금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애로를 갖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대출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대출에 22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569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남북경협피해조사단에서 5·24 조치로 인해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한 104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 피해 손실액을 합하니 4030억이나 됐습니다.

아까 그러한 통계 수치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지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인접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간접 피해액만도 13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4 조치로 인해서 남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주변 지역 경제가 아사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경협사업을 승인만 했지 장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정부에 계시니까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저희도 5·24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특히 고성 지역의,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고성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긴급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색된 관계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정희 의원** 통일부에서는 남북경협을 승인만 했지 장려는 하지 않았고 지경부에서는 그것은 통일부의 일이나까 나는 자세히 모르고, 이렇게 책임을 지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남북경협이라고 하는 시장을 누가 열어 주었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남북경협은 지난 2000년 초부터 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죽해서 남북경협의 문을 두드렸고 또 그런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남북경협이 위축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정희 의원** 차제에라도 지경부에서 이 남북경협에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예, 알겠습니다.

○**전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퇴행하

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경제협력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고비용·고임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한반도 경제시대의 첨병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통일의 첨병인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내 투자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개성공단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떤 손실보전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대체 생산지 발굴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북한 노동자가 남측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남측 접경지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DMZ 내에 가칭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거나 제2개성공단 설립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상호 이익 실현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보다 한 단계 격상된 개념의 가칭 한반도경제동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남북교역을 돕기 위해서 통행·통신·통관과 같은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제2개성공단을 짓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TCR·TSR과 같은 철도를 구축하고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누가 이익을 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겠습니까? 여건만 된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이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변화된 자세,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희 의원** 북한의 변화된 자세와 모습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더 진전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희 의원** 그런 시각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데 부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처럼 이 정부에서도 이 봉쇄정책을 풀고 남북 간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장관 나와 주시지요.

지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난 3일까지 전국 태풍 피해는 농작물이 13만 8000여 ha, 비닐하우스·축사 농업시설이 2만 8000여 동 그리고 수리시설 7개소, 가축 60여만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벼의 알곡이 말라서 쪽정이만 남는 백수현상이 호남평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피해 규모가 무려 8만 5000여ha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이러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현장 방문 아직 못 했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정희 의원**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더 절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인 익산의 농업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익산은 현재 4500농가에서 7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농민들의 처절한 모습도 봤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희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가구당 복구비 지원 한도액을 현재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태풍의 정책지원 자금 규모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규정과 조건만 내세우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2개 자치단체

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미 선포를 한 바 있고 피해 사실이 확실한 이재민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확실히 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전정희 의원**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가 내년도 국비로 107억 원을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직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한 20일 정도 더 심사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농림부하고 복지부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관련 규정을 좀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희 의원**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전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범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뢰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정부와 그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뢰야말로 물질 자본, 인적 자본에 이은 제3의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뢰 수준은 너무나도 낮고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신뢰 수준이 OECD의 거의 꼴찌 수준인 평균 4.1에도 못 미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진 이유는 원칙 없이 남발되고 있는 무책임한 정책들과 또 원칙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반복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무수히 내놓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그리고 정책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책임감 있게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책의 신뢰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에 대통령 임기 동안 실천할 100대 국정 과제를 발간했습니다.

총리 잘 아시고 계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의원** 국정관리과에서 아마 이걸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달성됐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역점 정책을 종합해서 100대 국정 과제를 2008년 10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국정 과제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총리실에서 추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표가 있습

니다마는, 이진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범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830개 과제 중에 375개가 완료돼서 반이 못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455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안종범 의원** 그런데 이 낮은 달성률 자체보다도 그 내역, 달성된 것조차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국정 과제 자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부 과제는 지연이 되거나 또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상황이 변동돼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거나 또는 그밖에 입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안종범 의원** 과제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선정된 것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100대 과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료된 것은 375개 또 현재 지금 정상 추진인 것은 455개입니다마는, 그 나머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무리했던 그런 사정도 있을 거고요 또는 상황이나 사정이 변경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즉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확보가 되지 못한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범 의원** 예,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세울 때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100대 과제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즉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그다음에 실효성과 일관성이라는 게 아예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과정이 미약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장의 효과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점점 힘들어지고 성장을 한들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맥락에서 일자리정책이야말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을 한 게 연간 50만 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6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50만 개, 60만 개 중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걸 정권별로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또 2010년 이후에 재정 위기, 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 한 300만 개, 약 60만 개씩 매년 해서 한 300만 일자리를 만들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하여튼 120만 개 정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정부로서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정책에 두었습니다.

○**안종범 의원** 저는 일자리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몇만 개, 노무현 정부가 50만 개에서 25만 개를 채 못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60만 개 했지만 평균 20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는 일자리 수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총리께서도 일자리 수에 집착하기보다 질적으로 그리고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히 일자리 하면 그

래도 질이 좋은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말하자면 지방의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이런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질이 좋은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안중범 의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2010년부터 고용전략회의를 매달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내놓는 각종 일자리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계획을 세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전략회의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어떠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이제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처가 한 11개 부처가 됩니다. 11개 부처에 32개 과제가 일자리하고 관련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 한 2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130개로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하고 또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조정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평가할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반기별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부처별로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것을 환류(피드백)를 해서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안중범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전략회의가 총 11번 열리는 동안에 그동안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어떤 보고를 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부처가 앞다투어서 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별도로 내놓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아닌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굉장히 미흡했고 그 과정에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

록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기본법이 요구하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이 언제 마지막으로 세워진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총리실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만 하더라도 2010년 11월, 2011년 12월 계속해서 국무회의나 경제정책조정회의나 위기관리대책회의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전부 총리실이 함께 해서 만들어진 회의이고 대책이다, 우선 그 정도만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2010년에 2020 국가고용전략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고용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4대 전략, 고용 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취약 인력(여성·고령자) 활용과 직업능력 개발 강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등 이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와 같은 기본전략을 토대로 해서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대상별, 사안별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범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하에 계획이 마지막으로 세워진 게 2004년, 2008년 계획이었고 그 후에 2020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에 그 계획을 같음한다라고 그 당시에 윤증현 장관이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감 때 윤증현 장관께서 2020계획이 1차 계획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곧 2차 고용전략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10년에 수립된 2020 국가고용전략을 보완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연구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범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실이 모든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서로 이기적으로 각 부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정책들의 조정을,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슨 정책보다 일자리정책은 중복적이고 부처 간에 어떤 조정이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단지 일자리 수가 아니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계획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일단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되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내실화할 수 있는 또 사정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건 당연히 중간중간 또 해 가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역이 진행된다고 해서 종래에 세워졌던 계획 자체가 유보되고 중단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의원** 일자리와 더불어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정책의 조정 통합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있고 그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떠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말씀 그대로 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종범 의원** 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1년에 한 번 채 열까 말까하고 최근에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이 관련된 부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처 간에 또 조정도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구가 그동안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고 또 그 역할을 국무총리실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정말 큰 틀에서 사회 보장 정책을 정하는 것이고요. 복지하고 관련된 그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의 TF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취임하자마자 감사원에서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감사를 한번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제가 먼저 총리실에 와서 역점적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복지사업,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복지 전달 체계를 정확히 갖추고 하는 그런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여러 부처에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고 또 복지 전달 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회통합망 건설을 추진을 하고 또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을 증원하고 하는 등등의 큰 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장이 팀장이 되기도 하고 또 국무차장이 되기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국정운영실장이 되기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업무보다도 복지하고 관련된 업무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말하자면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대대적으로 TF팀을 운영했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기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조정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TF팀을 운영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든다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모든 것을 다 TF팀을 가동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 예를 든다면 교과부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이고 또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중복이 되고 부처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기관이 서로 중복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오래된 싸움 중의 하나가 희망리본프로젝트와 또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의 중복 문제를 조정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국무총리실이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부처 간에 서로의 역할 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부처 간 업무의 기능의 분담이라든지 조정 역할에 너무나 취약한 게 아닌가라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에 관한 사업 내용이 아마 이백몇십 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지TF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백몇십 개로 줄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에서 제일 문제는 중복과 또 는 사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처 간에 그런 사업들을 통합하고 조정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통합시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또 사업에 따라서는 의원님같이 그렇게 통합 조정이 부실하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금천구의 통합 관리망을 잘 만들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그 현장에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정부가 특히 총리실이 복지에 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의원** 국무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정 기능이, 특히 복지에서의 조정 기능이 워낙 미약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중복이 있는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또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게 하고 하는 모든 기능을 갖추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내년 1월 27일 날 가동이 됩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종범 의원** 그렇다면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특별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제가 개수를 모를 정도로 한 오십여 개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든지 사회보장위원회든지 간에 그것은 실무위원회든지 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TF를 구성해서 사전 준비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 본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 관련해서는 준비가 실무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의원** 안타깝게도 실무 차원에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부가 주축이 되어서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 국무총리실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됴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그동안에 사회보장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데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는 주관 부처가 있습니다, 일응은.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일응 해 가지고 각 관계 부처하고 또 국무총리실하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통합 조정



하고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활동 시작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안고 방기를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나 총리실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범 의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합니다, 그것은.

○**안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제 개편이 매년 빈번하게 많은 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아주 대폭 개편하는 경우는 세제 개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법 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은 세법개정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안종범 의원** 지난해 국감 때 박근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조세정책 기본계획, 예를 든다면 2, 3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안종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운영 단위가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관한 조세 체계를 결정하고 임기 내내 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연도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세조정에 약간의 개정안을 덧붙이는 식의, 말하자면 큰 틀은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종범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짜도록 되어 있는 것과 상응하게 조세정책도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그 원칙이나 방향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짧막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점에 관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세입 세출이 다 각각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 쪽에 최대한 그런 운용 방향을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좀 더 따로 조세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안종범 의원** 중소기업은 ‘9988’이라고 99%의 사업체와 88%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책도 복지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부처가 칸막이를 쳐 놓고 중복이고 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14개 부처가 연간 약, 올해만 하더라도 12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또 사업은 약 7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층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미리 주시지 않아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유사 또는 중복사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간추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창업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년 동안에 지원하는 내용과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창업한 지 한 십 수 년이 지나 가지고 지원 자체가 이미 관례화되어 있거나 어떻게 보면 기득권화되어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권고에 맞추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그 위원회 의견으로 지금 권고를 한 상황이고 최대한, 내년도에 모두 그것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범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시켰고, 또 7월 30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안종범 의원** 이 점을 각별히 잘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게 내년 예산에도 꼭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복지 지출에 사통망을 만든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도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어떤 기업에게 어떤 부처 또는 자치단체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괄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경우에는 졸업제와 같은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도제를 적용을 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새로 구상하겠습니다.

○**안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안종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께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제 민생이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의 어떤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또 책임성이,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안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통합당 비례대표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통합당 비례대표 김기식 의원입니다.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독점·독식·독주의 경제에서 공생과 공존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판이자 룰의, 규칙의 집행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특히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지금 이게 지난주에 제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2011년 2월 14일자 공정거래위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맞습니까, 카르텔총괄과에서 작성한?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 원래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작성하시는 법은 없고 작성한 문건의 보고를 받으시는 것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모든 문건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오는 경우는 없고요. 그것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담당 과장 또는 국장의 선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있고 또 처장, 부위원장, 심지어는 위원장까지 오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김기식 의원** 이명박 정부를 시중에서 ‘도마뱀정권’이라고 합니다. DDoS 테러는 비서가 했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비서관이 주도했다, 그래서 참 꼬리 자르기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도 또다시 실무자의 문제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금 자료에 나오지만, 이 문건에 보면 2월 14일자로 지금 4대강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해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의 합의 사항을 확인했고 심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올해 6월 5일에야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식 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뭐하셨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은 20개 건설업체 및 또 10여 개

의 설계회사 등 관련자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밀도 있게 확인해야지만 저희가 이걸 확실히 담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중요한 담합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열이면 7건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 3건은 저희가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기식 의원** 그러니까 그동안 뭐하셨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관계자 소환조사라든지 업체로부터 입수한 문서 등을 정밀 검토·분석하는, 아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고 이 건에서는……

○**김기식 의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 문건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지난 기간 동안의 공문 수발신 내역을 지금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4대강 담합입찰과 관련해서 2009년 11월까지 자료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나간 뒤로부터 조사가 재개된 2012년 4월 30일까지 일체 공문 수발이, 오고간 내역이 없습니다.

통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할 업체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 등을 포함해서 공문을 먼저 보내는 게 관례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

○**김기식 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공개한 뒤에 해명자료 내셔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했다는데 현장조사를 하는데 왜 공문 수발 내역이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면 일단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제시해야지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기식 의원** 그런데 그 사이에, 1년 4개월 사이에 전혀 공문을 제출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일단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다시 2차·3차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징구하거나 관련자를 소환조사 할 때는 해당 업체 또는 담당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통상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는 것이 저희 조사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식 의원** 제가 또 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날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셨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답변에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담합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답변을 하자 그다음 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께서 ‘와전됐다’하고, 그다음 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날짜부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체, 앞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를 위한 공문 수발신 내역이 중단됩니다.

이건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지금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당시 이 의원께서 담합의혹을 제기한 것이 2009년 10월 8일입니다. 그로부터 저희가 바로 내부 준비를 해서 10월 19일 날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현장조사를 시작한 다음 정호열 위원장이 국회 답변……

○**김기식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열 위원장이……

○**김기식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2011년 2월부터 다시 의결을 시작한 2012년 6월 사이에 어떤 조사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의원님, 저희가 내부에 기밀유지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부분에서는 의원님께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1일 날 국회 답변을 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고서 불과 3주된, 20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세상에 20일 지난 다음에 무슨 우리가 담합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기식 의원** 그래서 1년 조사가 끝나고 나서 1년 정도의 내부검토를 통해서 2010년 말에 심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됐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최초의 초안의 작성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김기식 의원** 2010년 말에 1차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것에 기초해서 김동수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직후에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카르텔총괄과의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 보고는 받지를 않았습다.

○**김기식 의원** 그러면 보고하지도 않을 문건을 지금 담당자가 작성했다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그 보고 문건은 신임 국장한테 아마 담당자가 업무보고 하는 그런……

○**김기식 의원** 신임 국장은 보고를 받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문건이라는 게 국장 보고용이 있고 그 외 보고용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보고서를 받지 않았습다.

○**김기식 의원**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의원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통상 담합조사는 2~3년 정도 걸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상 2~3년 정도 걸린 사안이 뭐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의 통계를 보면 정확히 693일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는 3년 이상 걸린 것도 있고 2년이 걸린 것도 있는데 통상 693일, 다시 말씀드려서 1년 11개월 남짓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식 의원** 예, 그렇지요.  
제가 국회를 어떻게 속였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통상 2~3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성남판교 견하고 주공인천 사옥 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처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조서 시작일부터 의결 일까지로 정하지요. 그래서 보통 1년 내지는 아무리 길어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정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은 최초 의결일이 아니라 이의가 제기되고 나서 재의결된 기간까지를 합쳐서 2~3년 걸린다, 이렇게 지금 국회를 속인 거고요. 그런 2~3년 걸린

것, 재의결일까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로 드신 사안들은 모두 2년 안에 끝났습다. 그런데 지금 이 4대강 사건만 유독 2009년 10월 달에 최초 진술조서를 받은 뒤에 그 뒤로부터 32개월이 지나서야 최초 의결을 합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소위 서민형 음식인 라면 담합 사건의 경우도 4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담합 사건에서는 그 이상 걸린 경우도 많습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2년, 3년 또는 10년,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식 의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김기식 의원** 담당 과에서 작성한 문건에 최근 5년간 처리한 11건의 입찰담합 사건 중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고 가장 긴 것도 1년 반이다,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문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담합을 처리하는 데는 비단 카르텔조사국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국도 있습니다. 2개국을 조사를 하는데요……

○**김기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담합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놓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통계를 하는 데가 저희 심판관리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식 의원** 그다음 문건을 좀 보여 드리지요.

2월 14일 날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나서 2월 15일 날 문건이 바뀝니다.

‘심사완료’가 ‘심사 중’으로 바뀌고 맨 마지막에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시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는 이것을 2년 이상 끌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적습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사건을 처리해도 2011년 12월 달에 턴키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4대강 공사의 진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4대강 사건, 담합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면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 11년 안에 처리를 해도 4대강 공사가 준공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11년 내에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묵살하신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문건을 고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기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건을 보시지요.

2011년 7월 달에 또다시 카르텔총괄과가 문건을 제출합니다. 여기서는 아예 이제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대선 이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이 문건이 작성되어졌을 때 사후에, 정권 교체 이후에 무슨 문책을 받을지도 모르고 감사원이 어떤 조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윗선의 아무런 지시나 이것 없이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로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라고 해 놓고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것을 실무자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그 문건은 현재 저희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문건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이것이……

○**김기식 의원** 내부 문건임을 부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건 역시 저기에 적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총선·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어떤 것을 대선 이후에 결정을 했나요? 그것 되지도 않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식 의원**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할 것을 예상하다가 예상 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검찰이 마치 BBK·내곡동 등 사건을 털어 내듯이 이제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4대강을 조기에 처리하자라고 하고 방침을 바꾸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절대 그런 적도 없고요, 저는 그런 문건조차도……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문건인데요 아무튼 실무부서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간 방출된 적도 없습니다.

○**김기식 의원** 청와대와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없습니다.

○**김기식 의원** 만약에 청와대와 협의했음이 확인되신다면 물러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명백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확인하고 그 합의서까지 입수하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에 김동수 위원장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9조1항8호의 입찰 관련 조항이 아니라 3호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서 관련 매출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 본질은 공구를 나누는 것이고 입찰은 단순히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한 겁니다.

○**김기식 의원** 담합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담합은 자기 해당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식 의원** 맞습니다. 담합을 하는 이유는 가격을 높여서 이익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구를 나누고 담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담합의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거기서 응찰하는 행위는 응찰을 통해서 이익을 더 얻는 것이고 공구를 나누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응찰했을 때 유찰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담합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을 전도시킬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담합을 하는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단가를 높이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저희도 과거에 이런 물량 배분의 담합에 대해서 제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고 측에 해당되는 조사관의 종합적인 검토와 증빙자료 그리고 피고에 해당되는 기업 측의 항변 및 그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로 판단한 결과 이것은 공구 분할을 하고 입찰은 그 공구 분할을 각각 자기네끼리 몇 % 나눠먹기로 한 것에 대한 실행행위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한 겁니다.

역시 어느 쪽을 갔든 기업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기식 의원** 굉장히 오묘한 법리인 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19조1항8호 입찰 관련된 조항입니다.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경락자·가격·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돼 있고요, 3호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입찰 담합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저 8호를 적용해야 될지 3호를 적용해야 될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모욕적이시면 대한민국의 로스쿨 입학생들한테 저걸 시험문제로 내 보십시오. 100명이면 100명 다 8호라고 지적하지 저걸 3호라고 답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지금 의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상 1심 재판의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가 가지고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김기식 의원** 지금 감정입니까? 법조항을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공정위 내부고시입니다.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담합이 뭐냐? 제19조1항8호를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입찰담합은 8호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스스로 고시에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8호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입찰담합 관련 조항이 아니고 용역 제한을 적용합니까? 그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이게 용역제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격 카르텔이 있고요, 물량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게 물량 카르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3호 조항이.

○**김기식 의원** 3호 조항이요 적용되는 것은 판

매량과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적용하는 조항 맞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그거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양쪽 어느 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물량이……

○**김기식 의원** 지금 4대강 공사가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조절했습니까?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담합을 해서 공사구간을 나누고, 나누어진 구간 하에서 90%에 가까운 입찰가격을 써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용역의 제한이고 생산량의 조절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이것은 16개 공구를 일제히 입찰을 시켰습니다. 같은 날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16개의 떡이 있는 겁니다. 그 16개의 떡을 A업체는 2개 이거 이거, B업체는 이거 이거, C업체는 1개, 이런 식으로 물량을 나눠 가진 겁니다, 이 사안은. 이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개 공구씩 입찰을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일제히 16개 공구를, 16개의 떡을 같은 날 입찰을 한 겁니다.

○**김기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한테 이 사건을 주고, 아까 얘기했던 그 8호 조항과 3호 조항을 주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시험문제를 내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3호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썩 뒤졌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십시오. 대부분 다 8호를 적용하고, 지금 3호를 적용한 게 2건입니다. 그 하나가 4대강이고, 나머지 1건밖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1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량과 판매량의 조절과 같은 용역제한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용한 겁니다.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 8호를 적용하면서 굳이 가장 중대한 범죄인, 공정위 스스로도 3점 만점에 3점 만점에 해당된다고 하는 가장 중대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3호를 적용한 이유가 뭐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은 같은 건설공사라도 특이하게, 만약에 16개 공구를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그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일제히 16개를 같이 한 겁니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그 떡을 나누어 갖는 아주 특이한……

○**김기식 의원** 공정거래위원장님, 8호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8호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기식 의원** 2009년에 신설됐지요? 모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그거 좀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김기식 의원** 왜 신설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왜 신설됐냐고요?

○**김기식 의원** 예.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기식 의원** 무슨 사건 때문이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보다 정확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되니까 보완 부분은 끊임없이 가지요.

○**김기식 의원** 8호가 신설된 것이 지하철 공사 구간을 나눠서 담합입찰을 한 행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4호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신설한 게 8호 조항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현혹시켜 오신 대로 하나의 공사가 아니고 여러 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있어서 담합을 보다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8호 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8호의 역사도 모르십니까? 할 말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3호를 적용한 게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용한 게 아니라요, 저희 9명의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법리를 적용해야지 우리가 가장 적합한지, 이래 가지고 또 기업들이 항소를 했을 때 우리가 법원에서 지지 않고 이길 것인지 그것을 종합 검토한 겁니다.

○**김기식 의원** 계속 변명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얼마나 깎아 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8호·3호 조항을 변경해서, 원래 적정 과징금 7335억에서 8호에서 3호로 적용을 바꿔서 2920억을 깎아 줬습니다. 기준율을 10%가 아니라 7%를 적용해서 940억을 깎아 줬습니다. 가중해야 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1308억을 깎아 줬습니다.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444억을 또 깎아 줬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509억을 깎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저것 다 합쳐서 152억을 또 깎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5%, 6220억을 깎아 줬습니다.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이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엄정하게 처벌할 것인가보다는 건설업체에게 어떻게든지 과징금을 깎아 줄까 이것만을 고민해 준 흔적입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기식 의원** 예.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6000억, 7000억 하시는 말씀은, 저희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마이너스를, 깎아 줄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런 것, 그런 것이 같이 균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모든 것을 법상 규정상 있는 최고한도를 해 놓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과징금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최고로 해서 가져간 적도 없고요, 설사 가져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례·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가산요인과 감경요인을 균형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결정함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의원** 공정거래법에는 감경요인과 가산요인, 가중요인이 있는데 가중요인은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감경요인을 다 적용한 것이 과연 균형을 맞춘 건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가로서 앞서 19조1항의 8호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호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준재판기관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해 놓은 결론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확신이 선다고 하더라도 이게 3호다, 8호다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의원** 공정위 사건 처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말씀하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고 이렇게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쪽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분서에 이렇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경우든 그와 같은 사항을 기재했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총선 대선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위원장께서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문서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 만약 실재하는 확인되는 문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사실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의원 예, 실무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질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선·총선을 고려를 하고 뭐 그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다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이렇게 찝짜미 때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의원 이것은 그 경질을 넘어서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데 법무부장관에게 이 점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반 행정기관같이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묻고 할 사안은 아닌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식 의원 지금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직무유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요청한다면 본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총리, 4대강 담합 사건은 지금 밝혀진 약 3조 5000억 외에 나머지 18조 전반에 걸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언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전체에 대해서 담합 비리를 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단순한 풍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확실한 수사 개시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공정한 물의, 규칙의 집행자여야 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4대강 담합 비리를 은폐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되고 지난 2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허위보고를 해 온 것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박병석 김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서면답변서】

○국무총리 김황식

(심상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쌍용자동차가 98년 대우그룹으로 팔려갈 때부터 2011년 마힌드라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 주인이 바뀌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쌍용자동차 매각은, 주채권은행(조흥은행) 등과 당사자 간 계약(2004년, 中 상하이차 매각), 법원의 법정관리절차(2011년, 印 마힌드라 매각)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개별 회사의 매각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004년 1조 2,000억 상당의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단돈 1,200억에 헐값에 팔아 넘겼음. 당시 노동조합과 저는 상하이차는 기술을 빼가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먹튀 자본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나, 정부가 매각을 강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쌍용차 매각 당시 쌍용차 노조와 상하이차는 투자실험협약을 체결(2004.10.28)하여, 고용안정과 회사의 장기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는 개별 회사의 매각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58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을 수출할 경우 승인 또는 신고의무 부과(전기전자 8개,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7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17개, 우주 5개, 생명공학 3개)

상하이차는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3,000여명의 노동자를 쫓아 냈음. 이것이 철저한 회계조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조작에 의한 법정관리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계법인인 안진·삼일 회계법인과 정부·산업은행·금융감독원·파산법원이 공모한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노조의 민원에 따라 금감원은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2011. 12. 8~2012. 5. 4)한

결과, 금감원은 일부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나, 경미하여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동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됨

2009년 국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으로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음. 이것은 MB 정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목적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평택공장 점거농성(77일간)과 이에 수반된 폭력행위 등 수단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된 불법파업이었음

\*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2010도11030)

○당시 노조의 공장점거 농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법정관리 중이던 사측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권력 투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를 현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에 의해 발생했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노사관계의 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2009년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매출로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데, 단 한명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음. 2009년 정부의 개입 아래 노사가 맺은 약속이 3년이 지난 지금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지?

○쌍용차 무급휴직자의 업무 미복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급휴직자 복직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기업이 경영정상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봄

○ 그간 정부는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구(2009.8~2010.8)」 지정,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2011·2012년 각 2억 원) 및 ‘쌍용차 재취업지원 TF 운영 등을 통해 취업 및 생계안정을 지원해 왔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경대수	고희선	권은희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현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근혜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정복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청래
조경태	조원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박대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91인, 기권 의원 없음)

**○출석 의원(27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근혜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성범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김영록 김을동 김재경 김정록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신상철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김태환 김한표 김현숙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중범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도종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유원혜 유성엽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우원식 유기준 유대운 유은혜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유기준 유승우 유승희 유은복 유정복 서용교 설훈 성완종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재옥 윤수미 신성범 신의진 심재권 심재철  
 유인태 윤명희 윤상현 윤후덕 은노근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윤관석 윤호중 윤낙연 이노근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윤진식 이균현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언주 이우현 이인영  
 이강후 이명수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언주 이재균 이진복 이한성  
 이만우 이상규 이석기 이석현 이우현 이인영 이재균 이진복 이찬성  
 이병석 이상기 이석현 이우현 이인영 이재균 이진복 이찬성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우현 이인영 이재균 이진복 이찬성  
 에리사 이완영 이이재 이장우 이종걸 이진복 이찬성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장우 이종걸 이진복 이찬성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종걸 이진복 이찬성  
 이재영 이종훈 이주영 이철우 이한구 이현재 인재근  
 이종진 이채익 이철우 이한구 이현재 인재근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구 이현재 인재근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현재 인재근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진  
 진병헌 진순옥 진정희 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김광림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상훈 김상희 김재경 김정록  
 김종훈 김춘진 김한표 김현숙  
 김한길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김희정 노영민 노응래 도종환  
 류지영 문정림 민홍철 박근혜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민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윤근원 유철우 유정복 유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이채익 이학재  
 이진복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전순옥 정문현 정수성  
 정우택 정희수 조원진 조현룡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진영홍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87인)

강기윤 강은희 경대수 김광림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세연 김승남 김용익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희국 류성걸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성효 박성효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설훈  
 성완종 손인춘 신장용 심재권  
 심학봉 양승조 염동열 원혜영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진식

○개의 시 재석 의원(135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김관영

이낙연	이만우	이병석	이에리사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종훈	이진복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순욱	정수성	정청래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진성준
진영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한선교	한정애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지만	

○산회 시 재석 의원(74인)

강은희	강창일	김광림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민기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종훈
김춘진	김한표	남인순	노영민
류성걸	류지영	문희상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지원	박창식	배기운
백재현	서용교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심윤조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유대운
유성엽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호중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미경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李宰榮	이종훈	이한성	이현재
임수경	장윤석	전순욱	전정희
조명철	진성준	최봉홍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청가 의원(10인)

길정우	김근태	金永柱	김형태
문재인	박영선	박혜자	백군기
장하나	한명숙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윤원중
입법차장	김성곤
의사국장	한공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황식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출석 정부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제 1 차 관	김응권
제 2 차 관	조울래
지식경제부제1차관	윤상직
국토해양부제1차관	한만희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금융위원장	김석동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조경태·백재현·김재윤·김영록·이종걸·변재일·김동철·김진표·박혜자·배재정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영주·김영환·홍종학·신경민·서영교·유대운·전병헌·문병호·김우남·이종걸·배기운·이춘석·조정식·장병완·원혜영·박남춘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현숙·홍지만·김정록·남경필·민현주·이완영·박대동·신경림·문대성·김세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오제세·우윤근·양승조·김성주·박완주·김관영·이낙연·이석현·진성준·김동철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정록·강기운·박인숙·황진하·정희수·박성호·이노근·이낙연·김재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정갑윤·최봉홍·김을동·김정훈·문대성·김세연·김태원·박창식·박민식·원유철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최민희·김성주·배재정·배기운·

백재현 · 이연주 · 전병헌 · 남인순 · 김광진 · 김상희 · 진선미 · 서영교 · 유대운 · 이찬열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강기윤 · 박성호 · 이종진 · 이에리사 · 이명수 · 이낙연 · 김태원 · 신성범 · 김성찬 · 강길부 의원 발의)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서영교 · 박홍근 · 한정애 · 우윤근 · 유대운 · 이낙연 · 김성주 · 진정희 · 이상민 · 민홍철 · 정성호 · 김미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9. 7 정부 제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현숙 · 홍지만 · 김정록 · 남경필 · 민현주 · 이완영 · 박대동 · 신경림 · 문대성 · 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9. 7 정부 제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현숙 · 홍지만 · 김정록 · 남경필 · 민현주 · 이완영 · 박대동 · 신경림 · 문대성 · 김세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이상민 · 윤후덕 · 배기운 · 윤호중 · 민홍철 · 정성호 · 김재윤 · 송호창 · 주승용 · 이낙연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강기윤 · 金永柱 · 박성호 · 주영순 · 이명수 · 이낙연 · 김태원 · 신성범 · 권성동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진식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윤진식 · 이한성 · 김영주 · 황주홍 ·

이우현 · 윤명희 · 이만우 · 홍문종 · 강길부 · 성완중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영주 · 김영환 · 홍종학 · 신경민 · 서영교 · 유대운 · 전병헌 · 문병호 · 김우남 · 이종걸 · 배기운 · 이춘석 · 조정식 · 원혜영 · 박남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재원 · 조원진 · 문대성 · 김정록 · 박덕흠 · 주호영 · 권성동 · 김세연 · 최봉홍 · 김을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기선 · 김명연 · 이장우 · 윤명희 · 이현재 · 손인춘 · 황영철 · 이헌승 · 류지영 · 유승우 · 이에리사 · 김기현 · 김도읍 · 한기호 · 김진태 · 염동열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문재인 · 이상민 · 도종환 · 홍영표 · 김현 · 김용익 · 윤후덕 · 임수경 · 배기운 · 배재정 · 최민희 · 서영교 · 유대운 · 김윤덕 · 민홍철 · 전해철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안민석 · 전병헌 · 진정희 · 배기운 · 홍종학 · 김춘진 · 이용섭 · 김재윤 · 양승조 · 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현숙 · 홍지만 · 김정록 · 남경필 · 민현주 · 이완영 · 박대동 · 신경림 · 문대성 · 김세연 의원 발의)

9월 1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박인숙 · 류지영 · 함진규 · 이현재 · 이채익 · 강은희 · 박성호 · 고희선 · 윤명희 · 민현주 · 김을동 · 김명연 · 정희수 · 이종훈 · 최봉홍 · 신경림 · 김정록 · 강동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박인숙 · 류지영 · 함진규 · 이현재 ·

박성호 · 윤명희 · 민현주 · 김을동 · 김명연 · 정희수 · 이종훈 · 윤재옥 · 최봉홍 · 신경림 · 김정록 · 강동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강기운 · 박성호 · 이종진 · 이에리사 · 이명수 · 이낙연 · 김태원 · 신성범 · 김성찬 · 강길부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강기운 · 김영주 · 박성호 · 주영순 · 이명수 · 이낙연 · 김태원 · 신성범 · 권성동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문재인 · 이상민 · 도종환 · 홍영표 · 김현 · 김용익 · 윤후덕 · 임수경 · 배기운 · 최민희 · 배재정 · 유대운 · 서영교 · 김윤덕 · 진선미 · 민홍철 · 전해철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9. 7 조해진 · 윤명희 · 서용교 · 홍지만 · 최봉홍 · 이종훈 · 김성태 · 김영우 · 김을동 · 이재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9. 7 김기선 · 김진태 · 유승민 · 강은희 · 조현룡 · 박창식 · 한기호 · 이노근 · 윤영석 · 박성호 · 손인춘 · 정문헌 · 김명연 · 이장우 · 나성린 · 윤명희 · 이현재 · 황영철 · 이현승 · 류지영 의원 발의)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2. 9. 7 김현숙 · 홍지만 · 김정록 · 남경필 · 민현주 · 이완영 · 박대동 · 신경림 · 문대성 · 김세연 의원 발의)

9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이노근 · 유승우 · 안홍준 · 조현룡 · 안효대 · 서용교 · 함진규 · 김성주 · 권성동 · 이종진 · 윤영석 · 김정록 · 신동우 · 김도읍 의원 발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기준 · 김우남 · 배기운 · 유대운 · 김동철 · 문병호 · 최원식 · 한정애 · 민병두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김영록 · 배기운 · 홍종학 · 김춘진 · 이용섭 · 김재윤 · 양승조 · 우윤근 · 조정태 · 안민석 의원 발의)

**대리운전업법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강기운 · 권성동 · 김태원 · 박성호 · 이명수 · 김성찬 · 김정록 · 문정림 · 이찬열 · 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아동 ·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2. 9. 10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안 철회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4 박인숙 · 류지영 · 함진규 · 이현재 · 이채익 · 강은희 · 박성호 · 고희선 · 윤명희 · 민현주 · 김을동 · 김명연 · 정희수 · 진정희 · 이종훈 · 최봉홍 · 신경림 · 김정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4 박인숙 · 류지영 · 함진규 · 이현재 · 박성호 · 윤명희 · 민현주 · 김을동 · 김명연 · 정희수 · 진정희 · 이종훈 · 윤재옥 · 최봉홍 · 신경림 · 김정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9. 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311호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공동행동 박경석으로부터 박원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BMW코리아의 차량수입가격 조정현황 관련 자료 축구의 건에 관한 질문서**  
**고속특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

**촉구의 건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2. 9. 7 안민석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국가기록원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12. 8. 30 백재현 의원 제출)

이상 2건 9월 7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 서비스 제  
공계획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9. 7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